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6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Status Assessment of 2016 and Forecast for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6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Status Assessment of 2016 and Forecast for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목 차

Ⅰ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요약)

1. 국문요약 1
2. 영문요약(Executive Summary) 11

Ⅱ 2016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2017년도 전망

1. 2016년도 평가 25
2. 2017년도 전망 41
3. 정책적 고려사항 56

Ⅲ 2016년도 국제정세 평가와 2017년도 전망

1. 2016년도 평가 59
2. 2017년도 전망 75
3. 정책적 고려사항 90

Ⅳ 2016년도 신안보분야 평가와 2017년도 전망

1. 2016년도 평가 97
2. 2017년도 전망 107
3. 정책적 고려사항 115

I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요약)

1.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 2016년도 평가

- 핵분야에서 북한은 4차·5차 핵실험을 통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도록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
  - 6월 무수단미사일 고각발사에 한번 성공하고 8월에는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상당한 진전을 거둠
  - 북한이 올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SLBM시험에 집중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통해 대미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
- 정치분야는 7차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직에 취임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신 권력구조 출범 및 공포통치 강화를 통한 장기집권 기반 확보에 주력
- 경제분야는 7차 당 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어업권 대중판매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김정은 치적 과시용 우상화물과 여명거리 건설 등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불균형이 심화

- 사회분야는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및 결정 관철을 위해 '70일, 200일 전투' 를 강행했으며, 청년동맹 9차 대회·직업총동맹 7차 대회 등 각종 단체들의 대회개최로 사회 전반에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완비를 시도

- 대외관계는 7차 당 대회 후 공세적·다각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미관계·대중관계·대일관계 악화를 초래했으며, 후반부에 대중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

  - 대러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활동 반경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

-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 대(對) 강' 행보가 지속되면서 '경색국면'을 넘어 '위기상황'으로 진행

  - 북한의 핵보유 의지 지속과 우리의 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전 분야가 '올스톱'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사드배치 및 우리 국내정치 상황 등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비방 및 남남갈등 조장이 심화된 한해로 평가

▢ 2017년도 전망

- 핵분야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에도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6차 핵실험 및 추가 미사일 도발 시기는 김정은 생일(1.8)·트럼프 행정부 출범일(1.20)·김정일 생일 75주년(2.16)·김일성 생일 105주년(4.15) 등 주목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키도록 대중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북 선제타격론을 제기하는 등 대북 강압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북간 '강 대(對) 강' 대립 상황 발생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제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

- 정치분야는 김씨일족에 대한 우상화 강화와 세대교체 완성을 통한 김정은 정권 기반 공고화에 주력하면서, '백두산위인 칭송 국제대회'(8월)의 의의를 년초부터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김정은의 백두혈통의 위대성을 집중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

- 경제분야는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기초한 기간산업 정상화에 주력하고 중점 과제로 언급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데 매진
  - 대북제재의 무용론을 과시하기 위해 수출과 임가공 등 대외경제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인력송출 증가를 통한 외화벌이를 대대적으로 전개

- 사회분야는 내년 김정일 생일 75돌을 비롯한 각종 정주년 정치 기념일들을 맞아 '우상화' 사상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결집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의 복지 개선보다는 재해지역과 사회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선물 전달'로 표현되는 '애민정치'를 지속
  -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한류 등 외부사조 유입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공안기관들의 단속을 강화

-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핵보유를 전제로 한 체제보장과 대북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 공세를

강화하고, 체제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활성화

- 국제사회 내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 및 공식·비공식 외화벌이 사업 증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나, 우방국가들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친북노선 이탈 가속화가 예상

- 남북관계는 상반기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이 강행될 경우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대결의 증폭'을 통해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하반기 김정은 정권은 '미북 대화' 추진을 위해 남북 대화 제기를 비롯한 '위장 평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북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화공세와 함께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2. 국제정세

▢ 2016년도 평가

- 反세계화 및 反이민·反난민 정서가 반영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찬성 및 미국 대선에서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당선에 따른 안보·경제 측면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부각

- 2016년 11월 4일 파리기후협약이 발효, 신기후체제의 수립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동북아 역내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미칠 영향과 향후 해법 도출에 주목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온 대북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였고,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연례 인권보고서 발간 및 대북 인권제재안 발표 등으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시행

- 2016년도 중국 대내정세는 뉴 노멀(New Normal, 新常態 신창타이)에 따른 경제구조개혁과 반부패투쟁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주석 1인 권력체제 강화 방향으로 발전

  - 대외정세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황해(사드, 북핵) 등 '사해문제(四海問題)'에 직면해 상당한 외교적 도전과 극복이 쉼없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

- 아베정부는 참의원 선거 압승과 자민당규의 개정으로 최장 2021년 9월까지 안정적인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정책에 따라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가입을 추진하여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동조하는 의지를 표명

  - 한일 위안부 문제합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고 대북공조체제를 위한 장치 마련

- 러시아는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통합러시아가 압승해 푸틴의 정치 권력 체계가 공고화되었으나,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 부문에서는 침체 상황을 노정

  -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외교를 추진한 가운데 국제현안의 주요 행위자로 부각되었으며, 미·러 갈등 심화, 중·러 발전 지속, 러·일 협력 모색, 한·러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개최와 관계 재도약 도모, 대북제재 참여와 북·러관계 답보 상황 지속 등을 시현

▢ 2017년도 전망

- 2017년 미국 신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 및 NATO의 對러시아 강경 정책을 수정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간 갈등의 첨예화 우려

- 미국의 對中 견제 및 포위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통상마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MD(사드포함) 배치문제, 티벳문제, 대만 무기판매 문제 등으로 미중관계 갈등 재현 및 재조정 국면 가능성

- '워싱턴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온 트럼프 당선자가 공화당 기득권층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선거 기간 중 심화된 국내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향후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여부 가늠자 역할

-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를 비롯하여 한미 동맹의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됨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 예측 불확실성, 러시아 푸틴과의 관계 개선 시사,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무역수지 조정 등 경제 관계 재조정 요구 등 향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의 대두

- 2016년도 시진핑 주석 1인 권력체제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수면하에서 치열한 세력다툼이 전개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지배체제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

  - 중국의 대외 관계는 이른바 '사해문제(四海問題)'의 딜레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외교과제로 등장

- 미일동맹과 TPP가 아베정부의 동력이었던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하의 미일관계는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 및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일동맹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만큼 아베정부는 트럼프와의 신뢰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한일관계는 북핵 관련 대북공조 체제에 대한 협력은 진전이 있을 것이나, 한일 간 역사관련 제반 문제들은 여전히 갈등요인으로 작용
-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애국주의를 적극 활용하여 정치사회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경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수입대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상황 극복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주목하면서 대미 협력 모색 및 테러 등 초국경 안보 현안에 공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는 물론 중동, 유럽, 동북아등 국제질서 재편에도 적극 개입해 나갈 것으로 전망

3. 신안보 정세

▢ 2016년도 평가

- IS는 서방·러시아 군의 공세로 점령지의 약 30%를 상실해 쇠퇴 국면에 돌입했으나, IS추종자·이슬람 이민자 등이 유럽·아시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대형테러를 감행, 급진 무장테러조직으로서의 IS 건재를 오히려 과시
- 테러방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2016.3.3) 테러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겨우 확보했으나, 국정원의 대테러수사권 등을 규정하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테러 대응에는 아직 미흡

- 최근 5년간 국제 난민의 급격한 증가 추세 속에서 2016년 3월 발효된 EU·터키 난민협정으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감소

- EU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력을 고려, 난민을 할당·분배하는 난민 할당제가 헝가리와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제대로 실행되는데 한계

- 유럽 각국에서 난민으로 위장, 잠입한 IS 테러리스트의 사례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反난민, 反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포퓰리즘, 극우주의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여 정치 불안정을 야기

- 국내 난민신청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거주 불법체류자가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

- 국제적으로 중국은 자국내 인터넷 통제 강화와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법」을 제정하였고, 미국·프랑스 등 서구국가에서는 테러조직 IS의 암호화 통신에 대응한 국가안보 차원의 해법을 적극 모색

- 북한은 진화된 지능형 지속공격(APT), 랜섬웨어 유포 등 목표지향적 공격기법을 동원하며 정부고위 인사 스마트폰 해킹, 금융보안인증서 절취, 사회기반시설 공격 등 대남 사이버공격을 한층 강화
  - 고급 국가기밀과 군사·산업 기밀을 절취하고 경제난 타개를 목적으로 금융전산망 장악을 시도하면서 사회기간시설 해킹으로 사회불안을 조성

▢ 2017년도 전망

- 트럼프 후보가 美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행한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미·러 공동 IS 격퇴 작전 추진 등 미국의 對IS정책에 큰 폭의 변화 예상

- 이라크내 IS 수도가 함락되어 영토적 기반을 상실해도 서방 시민사회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면서 미국·유럽에 거주하는 광신 IS 추종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자생 테러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발생한 미국과 서유럽의 테러 사례에서 비춰볼 때,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자생테러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한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 보다 많은 난민을 수용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 사회의 압력도 증가 예상

- 중국이 인터넷 주권 확보를 위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여 현재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ANA)를 UN으로 이양하거나 국제 독립기구로 발족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미·중간 사이버 공간에서 대결 심화 개연성 증가

- 북한의 2017년 대남 사이버 위협은 정부 주요인사·국가핵심기반시설·국가공공망 및 첨단 기업기밀 등을 대상으로 한 타겟형 '정보절취'와 대선 등 정치정세를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 공세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

- 강도 높은 국제사회 제재에 봉착한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적 이익 확보나 자금절취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전산망 침투 등 대남 사이버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I

2016 Assessment and 2017 Outlook: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Situation

1. Retrospect and Prospects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 2016 Assessment

-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North Korea conducted its fourth and fifth nuclear tests in 2016, allegedly realizing the standardization of nuclear warhead that can be mounted on a wide range of ballistic missiles and presumably succeeding in developing a missile warhead nearly as powerful as a boosted nuclear fission bomb.
  - It had success in launching a Musudan missile at higher angle in June 2016 and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later in August respectively, demonstrating significant technological progress in developing ballistic missiles.
  - Massive efforts on test launching IRBM and SLBM this year can be interpreted as its desire towards early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through acquisition of atmospheric re-entry technology.
- North Korea's Internal Politics: The 7th Congress of North Korea's Workers' Party was convened in 36 years, electing Kim Jong Un as chairman of the party and also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This political move is the manifest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s endeavor to herald the advent of Kim Jong Un era in full scale and to secure the long-term power base through reign of terror.

- North Korean Economy: Despite the regime's endeavor to resuscitate its ruined economy by presenting a rosy picture with a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t the 7th Congress and doubling its effort to earn more foreign currency through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sale of fishing rights to China, North Korean economy suffered the deepening of economic imbalance due to the distorted allocation of resources to such projects as building statues to idolize Kim Jong Un and construction of the Ryomyong Street, a new residential area in Pyongyang, meant to showcase his achievements.

- North Korean Society: The regime launched the '70-day battle' and '200-day battle' campaigns for a successful opening of the 7th Party Congr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made in the party congress. A series of conventions, including the 9th Congress of the Youth League and the 7th Congress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Trade Unions, were also held to consolidate Kim Jong Un'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cross the entire society.

- North Korea's External Relations: North Korea pursued an offensive and multi-faceted foreign policy immediately after the 7th Party Congress, only to find a degradation of its ties with the U.S., China, and Japan. In the second half of 2016, it made

various attempts to restore its relations with China. However, no remarkable result has been made.

- In some sense a certain degree of amelioration of ties with Russia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ould work as a single comfort to North Korea. Nevertheless, it can be generally assessed that the radius of North Korea's diplomatic activities remained constrained.

- The fourth nuclear test by the North on January 6, 2016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 two Koreas have been locked in a tense standoff with no intention of seeking compromise, and 'stalemate' between the two has escalated into a near crisis.
  - As North Korea's insistence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collide with South Korea's zero tolerance for the North's nuclear armament, all inter-Korean contacts including dialogue, exchange and cooper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family reunion have come to a halt.
  - In the meantime, the North tried to change South Korea's policy toward it, exploiting the THAAD deployment issue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uth.

▢ 2017 Outlook

-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orth Korea's endeavor to ramp up its actual nuclear deployment through a series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will be continued even in 2017 when Trump inaugurates his administration. Possible dates for the 6th nuclear test and additional missile launches could be

assumed Kim Jong Un's birthday (Jan.8), inauguration of Trump administration (Jan.20), the 75th birthday of late Kim Jong Il (Feb.16), and the 105th birthday of Late Kim Il Sung (Apr.15).

-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step up pressure on China to force North Korea to drop its nuclear program, while employing coercive diplomacy against the North through advocating the idea of 'preemptive strike.' It is much likely that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sharply heightens and leads to another nuclear crisis wh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un into an uncompromising confrontation.

-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t would be most probable that North Korean regime will exert its best effort on cementing Kim Jong Un's power base through idolization of Kim Jong Un and his clan and completion of generational shift in power hierarchy. To the backdrop, the North is expected to conduct intense propaganda campaign that promotes the significance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aising the great personalities from Mt. Paekdu (to be held in Aug.) from the outset of 2017, meant to highlight that Kim Jong Un inherited the bloodline of Mt. Paekdu.

- North Korean Economy: The prime goal of the North is expected to be the normalization of its basic industries based on its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dopted at the 7th Party Congress. In specific, efforts will be concentrated in resolving the energy shortage which was raised as a focal task

while striving to shore up the level of its leading economic sectors and basic industrial sectors.

- To demonstrate the in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t will encourage projects to earn more foreign currency through means such as diversification of tourism products and increase of labor force export, while promoting the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export tall processing.

- North Korean Society: A series of dates for political anniversary that come upon a folding year including the 75th birthday of late Kim Jong Il will be exploited as momentum to strengthen ideological campaign and propaganda activities for personality cult of Kim Jong Un. While mobilizing social energy to consolidate the unity around Kim Jong Un, so called Kim Jong Un's 'politics of love for the people' will be continued in the form of Kim Jong Un gift to the disaster victims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neglecting the needs for welfare improvement through out the society.

  - In the meantime, internal surveillance and regulation by the security apparatus will be augmented to block the inflow of external trends and thoughts including *Hallyu*(K-art) that are deemed to threaten the regime.

- North Korea's External Relations: The North will intensify its peace treaty offensive, aiming at guarantee of regime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 while claiming nuclear arsenal fait accompli, to Trump administration regardless of its feasibility.

It is also expected that it will make proactive diplomatic endeavor to recover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animate ties with Russia for the regime survival.

- Multi-faceted efforts will be made to get the friendly for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earn more foreign currencies both in official and non-official way. However, such effort will only speed up the alienation of North Korea from the friendly countries as those countries come to jo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initiated by the new UN resolution.

- Inter-Korean relations is likely to run into a zero-visibility situation when Pyongyang conducts the six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test launches in the first half of 2017 and Seoul reacts with tougher sanctions.

  -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is a likelihood that the North will stage a 'disguised peace offensive' to South Korea by proposing a dialogue intending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U.S.-North Korea dialogue. However, it will likely employ 'double-edge tactic' of provocation and dialogue in case its endeavor fails to meet its expectation.

2. Retrospect and Prospects on International Situation

▢ 2016 Assessment

- The UK's vote to leave the EU (Brexit) was the reflection of the sentiment for anti-globalization, anti-immigration, and anti-refugees. The Brexit combined with election of Donald Trump

as U,S. president triggered the emergence of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especially on the security and economic fronts around the global community.

- With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going into effect on November 4, 2016,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tered into a new stage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mmunity paid increased attention to implications of the recent ruling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the ICJ and possible resolution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biggest security concerns in Northeast Asia.

-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to North Korea since its 4th nuclear test with the toughest sanction measures ever taken. Measures include designation of the North as a primary money-laundering concern, release of annual human rights report and a resolution on sanctions for human right abuse in the North.

- Domestically, China relentlessly pursued economic restructuring and anti-corruption campaign as its economy enters into the stage of the New Normal (Xin Chang Tai), while strengthening the single leadership of President Xi Jinping.

  - China, externally, experienced alternation of diplomatic challenges and overcomings due to the so-called 'four-sea issues,' namely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the Taiwan Strait, and the Yellow Sea (THAAD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 Japan's Abe government laid a stable cornerstone for long-term seizure of power, to the maximum of Sept. 2021, with a landslide victory in the Upper House election and revision of the ruling LDP's party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in Asia' policy, Japan bolstered the U.S.-Japan alliance and assumed a greater role in regional security affairs. It also manifested its willingness to align with the U.S.-led trade order by joining the TPP.
  - Settlement of 'comfort women' issue and signing of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bilateral ties. The GSOMIA provided a mechanism for joint co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 In Russia, the United Russia, the ruling party of President Putin,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 in Sept. 2016, making the power-grip of Putin more consolidated. The nation's economy, however, still remains stagnated due to the continuation of sanctions by the West.
  - In the international arena, Russia emerged as a major player in global issues by carrying out pragmatic and all-out power diplomacy. Russian diplomacy witnessed deepening of conflict with the U.S., continuation of betterment of relations with China, seeking of cooperation with Japan, recuperation of ties with South Korea through ROK-Russia Summit in Vladivostok, joining international sanction regime against North Korea, and stagnation of relations with the North.

▢ 2017 Outlook

- In 2017, the U.S. will likely face a strong backlash from its allies in case that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denies the earlier Iranian nuclear deal and NATO's strict anti-Russian approach.
- If China comfronts with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american strategy to contain and seize China, such issues as trade disputes,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outh China Sea, the U.S.-South Korea anti-missile defense system (including THAAD deployment), the Tibet issue and U.S. arms sales to Taiwan, will trigger the reemergence of Sino-American conflict, leading to readjustment of bilateral ties in 2017.
- With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aving severely criticized 'Politics of the vested interests in Washington' during his campaign, the key factor that will determine the success of his four-year term will be how he shapes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gress led by establishment Republicans and how he repairs the political rifts that worsened during the campaign period.
- Greater uncertainties are expected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due to the high possibility that the new U.S. administration calls on South Korea to raise its share of the cost for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the nation and calls for an adjustment in the existing U.S.-South Korea alliance.

- Trump's inauguration will likely bring about variables that affect the international order, as already indicated by his unpredictable North Korea policy, indication to thaw relations with Moscow, and his call for higher tariffs on Chinese goods and a reduction in the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adjust the overall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 Despite Xi Jinping's build up of power in 2016, a fierce internal power struggle is expected to unfold in 2017, especially in the lead up to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t remains unclear whether he will be able to rise to an indisputable one-man rulership.
  - In the field of foreign relations, China will likely end up locked in a diplomatic dilemma triggered by the disputes over the four seas around it. How the nation addresses them in a stable and effective manner will be the focal point for China's diplomacy.

- As the U.S.-Japan alliance and TPP were the key driving forces behind the Ab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 2016, U.S.-Japan relations under the forthcoming Trump administration will likely affect Abe's longevity in office. Furthermore, because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inevitable to deal with the rise of China and address North Korea's growing threats, the Abe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focus on building trust with Trump in 2017.

- In 2017, Japan and South Korea will see some progress in their joint defense against North Korea, but the historical issues will remain a hurdle to South Korea-Japan ties.

- Encouraged by strong public support for Putin, Russia will likely empower nationalism and strive for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The nation is also expected to step up efforts to revitalize its sagging economy by hosting various economic forums and nurturing domestic industries to replace imports.
  - While taking a keen interest in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Russia will seek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the U.S., actively join the global effort to address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play a significant role not only on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process of a realignment of the existing order in the Middle East, Europe, Northeast Asia, and the entire world.

3. New Secuirty Threat Environment

▢ 2016 Assessment

- The Islamic State (IS) has lost much of its momentum after having lost around 30% of its territory under attack from Western and Russian forces. Nevertheless, it showed off its strong presence as a radical armed terrorist organization, buoyed by a series of large-scale “lone-wolf” terrorist attacks launched by its followers and muslim immigrants in numerous places in Asia and Europe.

- South Korea's parliament finally passed the nation's first anti-terrorism legislation on March 3, 2016, after much discussion, laying the legal groundwork to combat terrorism. The bill, however, failed to define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rights of the nation's intelligence agency, falling short of addressing new types of terrorism.

- The EU-Turkey Statement of March 2016 led to a decrease in refugee inflows to the EU, reversing the last five years of a dramatic refugee surge in Europe.

- The EU proposed a refugee quota plan to relocate migrants from Greece and Italy to other EU nations depending on each EU nation's population and GDP. The quota plan, however, was dropped due to vehement opposition from Hungary and other Eastern European nations.

- As more cases were revealed showing that IS terrorists entered Europe disguised as refugees, anti-refugee and anti-immigration sentiment has grown and populist and far-right movements have gained ground, triggering political instability.

- As the number of asylum seekers has increased steadily in South Korea, so has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immigrants exploiting the nation's refugee system merely to extend their stays.

- China has enacted the Cyber Security Law to combat hacking and cyber terrorism, while the U.S., France, and other Western countries joined efforts for a countermeasure to encrypted ISIS communications to protect their national security.

- North Korea has intensified malicious cyber attacks against South Korea using Advanced Persistent Threats (APT), ransomware, and other advanced cyber attack weapons. Such cyber attacks include hacking into the smartphones of South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identity theft, and cyber attacks on key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 North Korea launched a barrage of cyber warfare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stealing South Korea's confidential state, military, and industrial information; attempting to infiltrate computer systems of Sou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economic losses following a series of sanctions; and hacking into the South's key infrastructure facilities to stir up social unrest.

▢ 2017 Outlook

- Donald Trump's victory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will likely lead to changes in U.S. policy in its war against the Islamic State, such as suspend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military support for moderate Syrian rebels and reaching out to Russia for a joint strike force against the IS terrorist group.

- With the de facto capital of the Islamic State seized, IS has lost its occupied territories. However, as Islamic State fanatics have infiltrated deeply into the West, the number of terrorist attacks to be carried out by ISIS-inspired terrorists in the U.S. and Europe will only increase.

- Given the terrorist attacks carried out in the U.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2016,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becoming a target of terrorist attacks involving Islamic radicals who are South Korean citizens cannot be ruled out.

- As South Kore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has enhanced its international standing, it will likely face increased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st more refugees.

- China has enacted the Cyber Security Law to safeguard its sovereignty in cyberspace, and it is currently calling on the U.S. to transfer control of an internet domain naming system to the U.N. or establish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take charge of the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 func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andoff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likely intensify in cyberspace as well.

- In 2017, North Korea will carry out two-pronged cyber attacks: targeted theft of information on South Korea's key government officials, crit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public-sector computer networks as well a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nd provocative political propaganda to influence the South's political and presidential election landscape to its benefit.

- It is likely that, faced with severe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will increase its cyber offensive against South Korea by infiltrating the computer networks of the South's banking institutions at home or abroad, especially for money or other economic benefits.

Ⅱ

2016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2017년도 전망

1. 2016년도 평가

▢ 북핵문제

【 4차, 5차 핵실험: 핵무기 수준 고도화 】

-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도나 폭발 위력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방사능 물질 검출이 필요
  - 4차 핵실험의 진도는 4.8, 폭발 위력은 6kt으로 3차시 4.9, 7.9kt 보다 약하나 폭발방식이나 사용한 핵물질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수소폭탄 여부 판정은 곤란
  - 제논이나 크립톤이 검출되면 핵폭탄, 헬륨이 검출되면 수소탄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포집 자체가 불확실

- 북한은 5차 핵실험에 대해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주장 하면서 1-4차 핵실험과의 차별화를 부각
  -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0-20kt으로 추정되어 과거 4-6kt에 비해 진전

    *** 1세대 핵분열탄은 일반적으로 20kt 내외의 폭발력으로 북한의 경우 평균값에 근접**

- 북핵문제의 심각성은 핵무기 숫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으며 소형화, 다종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북한은 4차·5차 핵 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

- 핵탄두를 실제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했을 때 발생하는 열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국내외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2016년 현재 10개 내외, 2020년까지는 100개에 도달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탄도미사일 발사: 다종의 투발 수단 확보 】

- 북한은 올해 총 8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중 6차 발사(6.22)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
  - 북한이 6차 고각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고도 1000km 이상 상승했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400km를 비행
  - 비록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초기 기술은 갖춘 것으로 분석

- 지난 8월에는 SLBM을 고각 발사로 최고 고도 500km 이상, 사거리 500km 정도의 시험비행에 성공
  - 실전배치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제 북한의 SLBM 실전배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

    *** 국방부는 실전배치에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항공우주 전문가인 존 실링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

  -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능력 고려시, 주한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 미군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되어 최소 억제력을 확보

- 북한은 8월과 9월에는 노동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해 대부분 1000km 안팎을 비행하는데 성공
  - 200여 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노동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

- 북한이 올해 IRBM이나 SLBM 시험에 집중하는 것은 대미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

-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진전으로 대남 공격용 스커드·노동 미사일 탑재 수준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추정

【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임박 】

- 북한은 늦어도 2020년까지 핵무기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美 서부 본토에까지 도달 가능한 ICBM 개발 예상

-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방치했다는 비판 비등

  *** 美 외교협회(CFR)는 지난 9월 『A Shaper Choice』 제하의 보고서에서 전략적 인내에서 탈피, 보다 확실한 signaling을 주는 대북정책 주장**

- 미국 조야는 모든 수단을 동원(레짐 체인지 또는 협상)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컨센서스 형성

  - 정책수단으로는 고강도 대북제재, 대북 선제타격(surgical strike), 선 핵동결 협상, 평화협정 의제 포함 등을 망라

▢ 정치

【 김정은 시대 新권력구조 출범 】

- 북한은 7차 당대회(5.6-9) 개최 이후 연이은 최고인민회의(6.29)를 통해 '유훈체제'를 넘어 '김정은式 유일통치체제'를 완비

  - 김정은은 6차 당대회(80.10)이후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총결산하고, 당 '제 1비서'라는 과도기 직책을 폐지하고 새로 신설한 '당 위원장'직에 취임

  ***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재편하고 정치국과 군사위원회를 정비하여 당의 영도적 지위와 기능을 강화**

○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의 직책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변경

- 북한은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당·국가 '최고수위' 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김정일식 선군정치를 넘어 김정은 시대 新권력구조를 출범

【 김정은식 공포정치를 통한 충성 강요 】

○ 권력구조는 '노-장-청' 조화를 선택,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면서 김정은 친위세력 구축에 중점

- 김영남 등 원로들을 주요 포스트에 상징적으로 계속 기용
- 최룡해(당), 박봉주(내각), 황병서(군) 등 당·정·군을 대표하는 3인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 최룡해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은 해임, 강등, 혁명화 등을 통한 검증에서 김정은이 최룡해의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

- 정치국·정무국 등 핵심 기관의 인물교체는 최소화하고, 당 중앙위원회는 충성파 인물들을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54.9%) 교체

○ 국가보위성을 내세워 고위인물에 대한 처형 지속

- 올해 들어 김용진 부총리('자세불량·종파분자 혐의')등 수십명을 처형하는 등 김정은 집권이후 140여명의 당정군 간부들이 처형
- 금년 2월 대남담당비서로 발탁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권력남용' 혐의로 1개월간 혁명화교육 조치(8월 복귀)

○ 한편 김여정(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진출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보선되는 등 위상과 역할 증대

【 핵-경제건설 병진노선 지속을 통한 핵·미사일 고도화 】

○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으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항구적 유지를 천명

○ 2차례의 핵실험(1.6/9.9)과 탄도미사일·ICBM·SLBM을 총 24회 33발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무기와 투발수단 고도화에 주력

- 핵무력에 의거한 '조국통일대전', "미국 핵선제타격"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 내부결속을 도모하면서 우리 사회내 불안감 조성

***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선군조선의 핵뢰성을 터칠 것이며 서울해방작전, 남반부 해방작전을 단숨에 결속, 미국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것" (5.7, 리명수 총참모장의 7차 당대회 토론)**

【 체제 결속력 약화 및 불안정성 증대 】

○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촉구하면서 주민총동원체제 강화

- 7차 당대회는 김정은이 공언한 '휘황한 설계도'나 '비전 제시'가 없이 순수 세습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모순만 시현

-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 공동구호(2.18)를 제시하고 70일전투(2.23-5.2)와 200일 전투(6.1-12.15)을 연이어 전개, 주민불만 내연

*** '오증흡 7연대 쟁취운동' 열성자대회(8.4), 청년동맹 9차대회(8.28), 직업총동맹 7차대회(10.27), 여맹 6차대회(11.17) 등 각 직능별·단체별 대회 개최**

○ 체제결속을 위한 사상교육과 주민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 요소들이 증가

- 특히 △김용진 부총리 처형(7월) 등 공포통치 강화 △해외식당 근로자 집단 탈북(4월)과 태영호 주영공사 등 해외공관 근무자 이탈 증가로 2012년 이후 감소되던 탈북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

- 김정은 체제는 '숙청 공포'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
  - 그러나 △ 김정은의 비합리적 지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권력층들의 면종복배 현상 증가 △ 조직·개인간 갈등 고조 △ 엘리트 이탈증가 등으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되는 추세

▢ 경제

【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

- 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하고 철저한 수행을 강조
  - 북한은 5개년전략목표로 △ 경제전반 활성화 △ 경제의 균형보장 △지속적 경제발전 토대 구축 등을 제시

-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 에너지문제 우선해결 △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 농업·경공업발전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을 주장
  - 특히 전력문제 해결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으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중심 고리로 규정

【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및 대북제재 무력화에 총력 】

- 북한은 당 대회 성과물 마련을 위한 '70일 전투'에 이어 5개년 경제 전략 수행을 통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극복을 위해 '200일 전투'를 강행
  - '70일 전투'에서 공업생산액 목표치의 144% 추가달성, '200일 전투' 첫달에는 전력생산과 화물수송 120%와 석탄생산 140%로 계획 초과 완수 주장
  - 그러나 북한이 초과 완수 했다는 계획이나 목표치가 그 어디에도 발표된 것이 없어 달성 여부가 불분명

- 북한은 새해 신년사에 이어 7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여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
  - 김정은은 현지지도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수입병' 퇴치를 강력 주문

-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은 민생경제 부문에 대한 시찰을 이어가며 제재 극복을 위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연출
  - 무역 및 인력 수출 증대, 외자유치와 국내 어업권 해외 판매 등 각종 가능수단으로 외화를 벌어 내수경제에 문제가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
  - 올해 북한은 부족한 외화확보를 위해 3천만불을 받는 조건으로 평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1천 500여 척의 중국어선에 서해 어업권 판매

- 북한의 對中 수출은 4~6월 크게 감소했으나 7월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임
  -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탄의 대중 수출가격이 급등
  -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를 위해 수출제품의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임가공품 작년 대비 12.4%로 3년 연속 증가했으며 아연광 수출도 증가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중 인력 수출이 증가했으며, 중국 정부의 협조로 백두산무봉국제관광특구를 완비하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

【 비공식 경제활동 확대 】

-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과 시장 관망정책 유지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을 시도

- 북한 중앙은행이 주민보유 외화를 유인하기 위해 시장금융체계인 송금·대출 업무를 부문적으로 시작

  *** 북한의 사금융은 수요와 공급 기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 2000년대 대부·투자 기능 확대, 2010년대 송금시스템까지 보유**

-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묵인 하에 개인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여 식량 부족 해결과 시장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

○ 북한 주민들의 시장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경제 부분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

- 대북 금융제재가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촉진하는 가운데 개인들의 달러착복 현상 증가 및 해외인력 수출 증대로 주민들의 달러 의존도 제고

- 시장경제 활동은 꾸준한 증가세에 따라 북한경제의 약 30%를 차지, 가계 저축의 일부가 투자지출로 이어져 시장의 생산유발 효과가 강화

【 전시성 건설 지원을 위한 자원배분 왜곡으로 경제적 불균형 심화 】

○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치적 과시를 위한 우상화물과 여명거리 등 전시성 건설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불균형이 심화

- 국제 사회의 시선을 피해 함경북도 무산에서 철광석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평안북도 신의주를 통해 여명거리 건설자재를 수입

- 함경북도 홍수피해 지역에서 생활시설 복구보다 김일성 영생탑, 유화, 모자이크, 연구실 등 우상화물 우선 복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

▢ 사회

【 주민 통제를 위한 노력동원 및 부작용 속출 】

-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및 결정관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극복 미명하에 ‘70일, 200일 전투’로 주민들에 대한 착취 및 통제 강화
  -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 운동’을 갱신한 김정은 시대의 ‘만리마 운동’을 고안하여 주민들에 긴장된 일정과 생활을 강요
  - 지난 5월에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촌동원 기간’을 선포하고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시장과 유동인구에 대한 통제 강화

- ‘70일, 200일 전투’와 계기마다 벌어지는 노력동원 강요로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누적되어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
  - 연이은 속도전식의 노력동원 체제는 주민들의 피로 누적현상을 초래하여 당국을 원망한 자살, 정권 비판 등 저항 행위가 증대
  -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홍수는 130여명 사망, 400여명 실종, 가옥 3만 채 파괴, 6만여명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로 나타나 주민 불만이 폭증

- 날로 가증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한국드라마 시청과 마약 투약, 미신행위, 사치스러운 생활 영위 등으로 극복하려는 북한식 사회적 ‘일탈현상’ 만연
  - 주민들이 ‘200일 전투’의 피로를 ‘태양의 후예’ 등 한국 드라마 시청과 한국가요 감상, 미신 행위 등으로 해소
  - 북한 1%의 부유층들은 48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며 뉴욕 맨해튼과 같은 수준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

【 각종 군중행사로 사회적 쇄신 분위기 조성 】

- 청년동맹 9차 대회('16.8)를 통해 혁명성이 부족한 장마당세대인 청년들의 결집을 시도
  - 김정은은 '청년들은 조선노동당의 큰 복'이라고 치켜세우며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을 주문
  -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 청년 소재의 노동신문 사설·정론 발표와 新영화 제작 등으로 '청년중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직업총동맹 7차 대회('16.10)를 35년 만에 개최하고, 농업근로자동맹 8차 대회('16.12)를 34년 만에 개최하는 등 각종 기관들의 행사를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김정은 영도체제 완비를 시도

▢ 대외관계

【 4, 5차 핵실험을 통한 북핵외교 전개 】

-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핵 외교를 돌파구로 삼아 '안보와 경제의 동시 진전' 전략을 추구
  - 당대회에서도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항구 전략으로 채택, 국제 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고 핵 무력 증강을 국가 목표 및 전략으로 책정
-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외활동을 전개
  - 평화체제전환과 평화협정추진 국면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비핵화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내세워 핵군축회담을 제시

【 7차 당대회 후 공세적·다각적 외교 전개 】

- 북한은 7차 당대회 이전까지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핵능력과 군사대국 이미지를 과시,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야기

- 7차 당 대회에서도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고, 7차 당 대회 후에는 중국, 쿠바, 베트남등 친북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의 부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순방외교를 전개

【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미·북 관계 악화 】

-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가능성과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으로 미국 조야에서 김정은 참수와 선제 공격론이 제기되는 등 북·미 관계 악화
  - 북한은 이에 맞서 한·미가 선제타격 징후를 보이면 미 본토, 태평양 일대 군사기지와 남한을 완전 불바다, 완전 폐허화하겠다고 위협(10.15), 외무성 리용필 국장은 6~8차 추가 핵실험과 선제핵타격을 경고(10.16)

-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북·미 간 비공식(트랙2) 대화(10.21~22)에서 미국이 북한의 9·19 공동성명 복귀의사를 타진했으나 북한은 안보상의 우려와 핵무기 필요성을 주장하며 핵고수 입장 유지

- 미국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목적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법안이 공식 발효됨(11.5)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고조

-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의 김정은을 포함한 특별제재대상 리스트 발표(7.7)에 북한은 격한 반응을 표출

- 북한외무성은 “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면서 ‘최고존엄’ 김정은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7.8)
- 보복조치로 “미국에 북·미 뉴욕 접촉채널의 완전 차단”(조선중앙통신, 7.11)을 선언했으나, 북한 당국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차질과 체제균열을 우려해 주민 대상 선전매체에서는 일체 未보도

○ 북한은 모든 대미접촉 중단과 함께 북·미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전시법’을 적용할 것을 선언

- 억류 중인 미국인에 대해 작전활동구역에서 민간인(외국인 포함) 일지라도 군사적 행위에 관심을 보이는 즉시 간첩으로 인식하고 체포 및 총살할 것을 규정한 ‘전시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위협

*** 북한은 현재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2명을 억류 중**

【 연이은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 급랭 후 관계개선 노력 】

○ 북·중 관계는 올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급랭했으나,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6.29)된 것을 계기로 북·중 관계개선 노력

○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처음으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대규모 대표단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5.31)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

- 북한은 리수용의 방중일에 맞춰 무수단 탄도 미사일을 발사(5.31)했고, 리수용의 시진핑 주석 면담일(6.1)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비행 시험 영상을 공개하는 등 ‘핵·경제 병진노선’의 강행을 시사

○ 북·중 양국이 중국의 건국 67주년 기념일(10.1)을 맞아 각각의 기념행사를 열고, 중국이 노동당 창건기념일(10.10)에 축전을 보내는 등 양국은 5차 핵실험과 중국 랴오닝 훙샹그룹의 북핵연계 의혹 이후 냉각된 양국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

-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6주년에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의 방북(2.2)에 이어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전격 방북해(10.24) 평양의 북·중 우의탑에 화환 진정

○ 북·중의 관계개선 행보는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해 달라고 각국에 요청한(9.29)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를 지속 하겠다는 메시지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은 북한 정권수립 68주년(9.9)에는 축전을 보내지 않았는데, 북한에 축전을 보낸 나라는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각각 16개국과 15개국 감소 (VOA, 10.9)**

○ 북한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홍수피해에 대해 2천만위안(약 34억원)의 긴급 인도지원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

【 일본의 독자제재 강화와 인권제재 주도로 북·일 관계 악화 】

○ 북한은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착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해체(2.12)하는 등 강력 반발

○ 북한은 인권유린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권유린 최고 책임자 처벌 권고 등을 포함한 인권결의안을 주도한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가중되는 데 대응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11.17)

- 일본은 북한의 5차 핵실험(9.9) 전후 두 차례 미국의 묵인 하에 중국에서 북한과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도 일본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

【 북·러 간 친선·협조 진전 】

- 북·러 수교 68주년(10.12)을 맞아 북한은 어떤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러시아와의 역사적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
- 러시아도 이에 호응,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한 현실을 다룬 기록영화 '태양 아래서'(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모스크바 상영 취소를 지시하고, 수해 피해 구호식량과 석유를 북한에 제공
- 중국이 북한 주재 대사관 직원 수를 줄인 반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수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11월 기준 17명으로 증가
-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력공급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가별 대북 독자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외교력 저하 】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활동 반경은 축소
  - 유엔회원국들이 대북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자국 주재 북한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증대함으로써 북한외교관들의 불법거래 축소 및 중단
  - 북한외교관들의 외화자금 확보미비로 외교관 활동에 막대한 지장 초래
- 대북제재 일환으로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외교관 및 북한 노동자 추방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 추락

【 북한과 전통적 우방국가 간 균열 】

- 4차,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동남아국가들을 공략해 외교적 고립상황을 타개하려 했으나 해당 국가들은 냉정한 반응

- 리수용이 비동맹운동(NAM)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동 방문, 아세안 5개국 방문에 이어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 연설을 실시하는 등 우방국가를 공략해 외교적 고립상황 타개 시도
  - 그러나 7월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동남아 국가 순방을 추진했으나 성사 불발, 9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국회 방문을 추진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거부로 무산

-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정보기술(IT) 인력 파견을 제안하고, 몽골에는 광산 노동자 파견을 타진하는 등 고립 타개책을 모색

▢ 남북관계

【 '경색국면'을 넘어 '위기상황'으로 】

-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행보가 전개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이 최고조되는 위기 상황 도래

-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 지속과 우리의 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경색국면이 점점 악화되어 남북관계가 '올스톱' 되는 상황에 직면
  -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북한은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핵선제 타격” 등의 위협을 통해 대남 압박 공세를 강화

【 남북 당국간 회담 전면 중단 】

-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7)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가동중단(2.10)으로 대응하면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15.12)」을 끝으로 남북대화가 단절

-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한 대남 대화공세를 전개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비핵화 우선 입장’을 거부함에 따라 남북대화가 성사되지 못함
  - 북한의 대화제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우리사회의 ‘남남 갈등’ 유도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염두에 둔 ‘위장 평화공세’로 ‘통일전선 전술’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

【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중단 】

- 4차 북핵 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단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강력한 제재 주도 △남북교류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에 활용될 가능성 차단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 등을 감안

-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은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도 잠정 중단
  -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특수성 및 시급성과 분배 투명성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 잠정 중단
  - 북한의 함경북도 수해 지원 역시 지원의 실효성과 투명성 및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음
- 이산가족 상봉은 올해 들어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제3국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만 명목을 유지

2. 2017년도 전망

【 2017년도 7대 관전 포인트 】

① 김정은 신년사
② 6차 핵실험 및 ICBM·SLBM 등 '핵능력 고도화' 추진
③ 김정은 우상화
  * 1.8 김정은생일의 국경일 지정, 生母 고영희 우상화 시작 여부 등
④ 권력층 세대교체 동향
  * 김원홍, 김영철 등 핵심측근들의 토사구팽 가능성
⑤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내구력 및 주민의식 변화 동향
⑥ 남북대화 및 미북접촉 재개 * 김정은의 방중 여부
⑦ 대남도발 및 우리의 2017대선 개입 동향

※ 김정은의 과체중·폭음·심장질환 가족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건강 이상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불배제

▢ 북핵문제

【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

- 북한은 2017년 초반에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고 평화 공세에 주력하는 한편 도발 병행 가능성도 상존
  - 북한의 목표는 단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북미관계 개선, 경제적 보상 등이 아니고 핵보유국 지위 획득
  - 트럼프 행정부 진영이 정비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가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

- 특히,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탄도미사일발사 시험과 ICBM 제조 능력 과시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농후
  - 가급적 조기에 핵무기 실전배치를 완성하고 핵실험중단을 선언, 미국과의 대화재개시, 사실상의 핵군축 회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림수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대내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는 김정은 생일(1.8), 트럼프행정부 출범일(1.20), 김정일 생일 75주년(2.16), 김일성 생일 105주년(4.15) 등을 상정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3차 북핵위기 발생 예상 】

*** 북핵문제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북핵위기'로 규정한다면 2017년은 1993년, 2002년에 이은 3차 위기**

- 북한의 노골적 핵위협은 북한의 바람과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는 해외 개입을 무조건 회피하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선별적 군사력 사용을 통한 '강한 미국' 지향
- 트럼프 당선자의 경험 부재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등 인선을 고려하면 보호무역 등 트럼프 아젠다 외에는 강경파(hard-liner)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키도록 대중압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제기하는 등 대북 강압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관측

-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다소 비현실적인 무역보복을 예시했는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수단인 대북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선제타격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대북 협상력 제고나 대중압박 가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주목

【 중국 주도의 북핵 외교를 통한 막후 협상타결 가능성 상존 】

○ 트럼프 당선자의 인식을 고려할 때, 3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중국 주도의 북핵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 농후

- 트럼프 당선자의 북핵문제 해법의 기본은 중국을 통한 해결임

○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고, 중국식 북핵문제 해법인 '왕이 구상(formula)'[1]을 가동할 가능성

---

1)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밝힌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의미

○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핵동결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최종목표를 두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국들과 핵 국가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 간의 출구 없는 대립 예상

▢ 정치

【 김씨일가 우상화를 통한 정통성 확보에 주력 】

○ 2017년은 김씨 일가 생일 기념일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로 이를 체제결속의 계기로 적극 활용

- 김일성 생일 105돌('12.4.15). 김정일 생일 75돌('42.2.16), 김정숙 생일 100돌('17.12.24), 김정은 생일 35돌('82.1.8) 등

  *** 김정은은 84년생이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정주기를 맞추기 위해 82년생으로 조작할 가능성**

- 연초부터 '백두산위인 칭송국제대회'(8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백두혈통의 위대성을 집중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을 '수령'의 반열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인정을 도모

○ 내년 초 김정은 가계 우상화 추진단계 및 일정 예상

- 당 선전선동부의 주관 하에 군총정치국, 청년동맹, 내각과 문화성 등을 대거 망라한 대내 '행사 준비위원회'를 가동

- 중앙당 내에서는 선전선동부(대내)와 국제부(대외), 통전부(대남)의 분담 및 공조체계로 '당 정무국 체계'를 운영

  *** '백두산위인 칭송대회'와 관련한 연간 집행일정은 주로 '노동당 정무국 지시문' 하달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견**

- '백두산위인 칭송대회' 기본일정과는 별개로 '광명성절·태양절 경축기간(2~4월)'을 설정하고 대내외 행사일정들을 확대 추진

*** △ 광명성절(2.16): 백두밀영 축포행사, 중앙경축대회 등 △ 태양절(4.15): 軍 열병식, 군중시위, 횃불시위 등 예상**

- 하반기에, 8·15와 선군절(8.25) 계기 '백두산위인 칭송국제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김정숙 생일(12.24) 경축일정까지 소화

○ 상반기에 주목되는 우상화 일정은 김정은 생일(1.8) 공식화 여부

- 내년도 김정은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려면 올해 12월 경에 '당 정치국 결정' 명의로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
- 김정은 생일 국경일 지정 문제는 김정은이 "간부들의 건의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백두산위인 칭송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탄생 의미와 '애민 정치'를 부각하는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

【 주민사상교육 및 공포통치·세대교체 강화 】

○ 김정은 시대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제·교양시킬 사상체계 확립

○ 고위급 인물에 대한 '정치 속죄양'식 처형을 확대, 권력층내 '2인자는 없다'는 경고메시지 전파 및 충성경쟁을 유도

- 김정은 시대 급부상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등 핵심들도 '제2의 채문덕[2]·제2의 장성택'이 될 가능성 불배제
- 부정부패·세도 등 연루자에 대한 '본보기식 공개처형'도 강화

***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사업보고시 "당 간부들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는 우리 혁명의 주적으로서 이를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

---

2) 채문덕 前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은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간첩조작 사건인 '심화조 사건'(2만여명 숙청)을 기획한 인물로서, 김정일은 숙청사업이 끝나자 오히려 그를 권한남용 혐의로 숙청

- 당·정·군 세대교체 확대와 함께 인민생활 향상을 명분으로 내각역할 증진 및 신진 테크노크라트 기용 확대
  -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물자부족과 충성경쟁 등으로 인해 각 기관 및 개인간 생존차원의 갈등 노골화

【 2018년 또는 2022년을 중장기 국정운영 목표연도 제시 】

-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도 성과 창출을 위해 전사회적 역량을 총결집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은 정권수립 70돌로서, '핵무력 건설 완성·핵무기 실전 배치 완료의 해'로 제시
  - 2017년은 2018년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각종 구호와 다양한 노력동원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 집권 10주년인 2022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달성의 목표 연도로 선포할 가능성
  - 2022년은 김일성 생일 110돌, 김정일 생일 80돌, 김정은 생일 40돌로서 김정은 집권 10년(2012~2022)간의 국정성과를 총화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달성'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이전에 8차 당대회 혹은 당대표자회의 개최도 상정 가능**

▢ 경제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기초한 기간산업 정상화 시도 】

- 북한은 '200일 전투'를 통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첫해 목표 수행을 총화하고 내년도 계획수행에 매진

- 7차 당대회와 5개년 경제전략에서 중점 과제로 언급된 에너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데 총력
- 에너지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 단천발전소 건설을 독려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주력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공업생산 정상화에 집중
-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수입병' 퇴치를 강력 주문하는 동시에, '자강력 제일주의'를 지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북한경제의 낙후수준으로 볼 때 '수입병' 퇴치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외경제 활성화로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 】

○ 북한은 내년에도 대북제재의 무용론을 과시하기 위한 '민생용' 광물 및 석탄수출과 피복을 비롯한 각종 임가공 수출에 총력
- 국제사회의 원자재 가격상승이 북한의 철광 및 석탄 수출의 증대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관광 상품 개발과 인력 송출 증가를 통한 외화 벌이를 대외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중국 안투현 관광국과 양강도 삼지연 관광코스, 단동과 신의주 자가용 이용 1일 관광코스, 나선·훈춘·블라디보스토크 3개 도시를 잇는 국제관광 코스를 개설 및 출시
- 종전의 건설과 봉사업, 피복가공 이외에 식료가공과 탄광부문 인력 수출을 늘이면서 새로운 인력수출 공간 탐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대중경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측에 무봉(량강도)관광특구 사용특혜를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중자유무역구(청진) 조성도 추진

- 북한은 중국 측에 1차로 개발한 특구의 무상 사용권 부여, 나머지 지역의 향후 50년간 개발권, 경영권, 사용권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건 제시

【 시장의 활성화 및 확대 】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의 단절로 시장의 활성화 및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시장 활성화 및 확대가 대북제재 하의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에 일정하게 기여

○ 북한은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시장 확대를 체제유지 차원에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당국은 장마당을 통한 현금수입을 늘이려는 목적으로 김정일 사망 직후 사라졌던 장마당 2부제를 부활시켰음**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파급영향 】

○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과 동·아연 수출 금지로 인해 북한이 WMD관련 자금 조달과 軍 유지에서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석탄이 대부분 군부에 의해 수출되므로 새로운 제재가 WMD 개발에 연관된 북한 전략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또한 자체 외화벌이로 수입·보장하던 군의 전략 4대 물자인 원유, 생고무, 데솜(데트론화학섬유), 식용유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

-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으로 중북국경에서 석탄 밀수 행위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시장의 활성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외화수입이 간절한 북한이 상한제로 수출 판로가 막힌 국내석탄을 밀수통로를 이용하여 처리 시도
  - 밀수통로를 이용할 경우, 돈주, 밀수꾼들의 석탄밀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광물 수출 금지 항목에 은, 동, 아연, 니켈이 추가됨으로 북한 중앙경공업공장들이 군수물자 생산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 아연수출 금지로 군에 화장비누, 치약, 칫솔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던 중앙경공업공장들의 조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
    ※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방직공장 등 중앙경공업공장들은 검덕의 아연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로 군인피복, 신발,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생산

- 북한 해외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로 외교관들의 활동과 해외공관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북한 외무성은 국가의 예산지원이 원활치 않아 관광비자 수수료와 해외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 수익금으로 해외공관 유지비와 월급 보장
    ※ 북한은 러시아,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 주재의 해외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수익 창출

▢ 사회

【 우상화를 통한 사회 결집 】

- 북한은 내년 김정일 생일 75돌을 비롯한 각종 정주년 정치기념일들을 맞아 '우상화' 사상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결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김일성 생일 105돌, 김정일 생일 75돌, 김정은 등극 5돌이 되는 내년에 백두산과 평양에서 3부자 찬양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우상화 극대화를 시도
- 이는 '백두혈통' 우상화로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반열에 확고히 올려 세워 이를 바탕으로 주민결집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북한 고립 시도 무용론을 과시려는 의도

【 주민들에 대한 선물정치 지속 】

- 사회 전반에서의 복지 개선보다는 일부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김정은 선물' 전달로 표현되는 '애민정치'를 지속
  -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과일, 수산물 등을 애육원과 육아원, 양로원 등 사회 취약계층들에 선물로 보내주는 보여주기식 '애민정치' 예상
- 북부 국경지역 홍수피해 지원으로 잠시 중지됐던 평양시 여명거리 완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한류를 비롯한 외부사조 차단 조치 】

- 북한은 한류를 비롯한 외부사조 유입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인식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장마당과 한류를 비롯한 외부사조에 그대로 노출된 청년층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공안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외부사조 유입을 단속
  - 보위성·보안성·검찰소 등으로 구성된 '620검열상무조'가 불법 영상물, 휴대폰 단속을 본격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 영상물 시청·유포 행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대외관계

【 유엔안보리 2321호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위상 전파 】

- 5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새로운 대북제재인 유엔 결의 2321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핵능력 과시로 국제 사회에 핵보유국의 위상을 인정받기를 기대

-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2017년 초반에 다양한 도발행태를 구사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재차 선언

【 대미대화 공세 】

-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핵 관련 대화의 틀을 먼저 제시하고 미국과 물밑 접촉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과정 자체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 평화협정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핵보유를 전제로 한 체제 보장과 대북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미평화협정 공세를 강화

-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형식적인 대화의 장을 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강도를 낮추면서 북한체제 보장을 받고, 비핵화를 최대한 미래로 넘기고자 획책
  - 이 과정에서 '한미일'과 '중국'을 분리시켜, 북중관계 회복과 미북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가려고 시도

【 북중관계 회복 및 대러관계 활성화 】

- 북한은 불안한 내부정세 하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5차핵실험으로 당분간은 중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므로 북한은 대중 과격언사를 자제하면서, 미중패권 경쟁을 활용
  - 사드, 남중국해, 미중무역마찰 등에 관해 중국의 편에서 대미비난을 가속화

- 북한은 중국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
  - 러시아는 과거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편을 들었던 국가이며, 미국 및 중국 견제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필요

【 김정은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의 가동 】

- 이수용, 이용호 등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인물들은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관리 및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각 국들과 경제외교를 가동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생존을 위해서 특히 제 3세계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도모
  - 국제사회내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 및 공식, 비공식 외화벌이 사업 증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 전통적 우방국가와 외교 지속 】

- 북한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 비동맹노선 국가와 전통적 우방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세적 외교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이완을 지속 추구

- 그러나 북한의 우방국가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북한과 '거리두기' 행보를 보여 북한의 6차, 7차 핵실험 시 친북 노선 이탈 가속화 예상

▢ 남북관계

【 상반기: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시계 제로' 상태 】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표로 상반기에 6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은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수립 이전에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 향후 미북 대화에서 '협상의 파이'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 핵·미사일 도발의 대내외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 김정은 생일(1.8) △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1.20) △ 김정일 75회 생일(2.16) △ 김일성 105회 생일(4.15) 등의 주요 계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직면
  - 북한이 △ 6차 핵실험 △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 국지적 도발 등 '위기의 상승'을 초래하여 한반도의 불안정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도발 이후 남북 대결의 증폭 현상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하반기: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따른 남북대결 국면 지속 】

- 김정은 정권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조정이 마무리 된 이후 '미북대화' 추진을 위해 남북대화 제기를 비롯한 '위장 평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
  -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 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유리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대미 접근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대남 평화공세를 추진

○ 북한은 대화공세와 함께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정권은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미·북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에 두면서, 남북관계는 '그럭저럭 현상유지' 또는 '긴장국면 에스컬레이트'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우리의 대선정국 개입과 차기 정부와의 대화를 대비하는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남 심리전을 강화

*** △우리사회 반체제 세력 활동지원 △통일전선차원의 남북대화 △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남북대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지'를 시도

- 미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로 북핵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적으며, 대북제재의 강화에 초점을 둔 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미북 대화가 어렵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으로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적으로는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 발 악재에 대한 우려와 교류협력 재개 요구 등이 높아질 것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중단 장기화 】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으로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사업의 중단 장기화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우리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사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경협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재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역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재개를 위한 계기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중단 장기화가 지속
  - 하반기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할 경우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남북 갈등 심화 】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에 대해 북한이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반발, 남북대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15.6.23)을 계기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시행('16.9.04)에 따른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강화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통해 북한인권침해사건 수집·보존관리와 인권단체지원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3. 정책적 고려사항

【 한미동맹 가치, 북핵문제 중요성 재확인 】

- 한미동맹의 미래와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에 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기 한미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
- 북핵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면 껄끄러운 한미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도 기대 가능
- 우리 정부의 주도로 트럼프행정부가 널뛰기식, 냉온탕식 대북 정책이 아니라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견인

【 트럼프행정부 초기 대북제재 모멘텀 유지에 만전 】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 및 한미일 독자제재안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압력을 가중
- 트럼프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전면적 2차 제재 조치(secondary boycott)를 실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공조에 만전

【 중국 주도의 북핵외교에 대비: 한미중 3자 대북정책 공조 추진 】

- 박근혜정부 초기에 우리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다가 사드 문제 등으로 동력을 상실한 한미중 3자 전략협력을 재타진
- 북한의 비핵화협상 복귀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유도

【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 】

-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 강구, 시행
  - 국제 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루프홀(loophole)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중국 등과의 협력 체제 강화
  - 향후 추가도발 일정까지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검토 보완
-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병행
  - 7차 당대회결정 관철 부진, '200일 전투' 실패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대북심리전 강화, 시장경제 확산, 외부사조 유입 활동 강화 등의 포괄적이고 공세적인 공략방안 추진

【 북한의 2017 대선 정국 개입 적극 차단 】

- 북한이 최근 우리 국내의 국정 혼란을 선동하면서 내년도 대선개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공세적인 방향에서 모색할 가능성
- 북한의 무력도발, 통일전선전술 등 대남공세 방향을 예측점검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
  - 안보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노력 강화

【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에도 대비 】

- 북한은 북·중, 북·러 관계개선 등으로 대북제재 이완을 도모하고, 김정은 우상화 작업 마무리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 대외변수의 급변과 함께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

-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시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대안들도 준비할 필요

Ⅲ

2016년도 국제정세 평가와 2017년도 전망

1. 2016년도 평가

▢ 국제정세 일반

【 이란 핵합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개시로 이정표 마련 】

- 이란 핵협상 타결(2015.7)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이란 핵협상 초기 이행 완료 확인의 검증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란핵합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공식 개시
- 對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계기, 이란과 IAEA가 핵 문제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란 핵협상 사례가 중동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의 적용 등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

【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EU 내분, 유럽통합 불안정성 고조 】

- 反세계화 및 反이민·反난민 정서가 반영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6.23 선거) 소용돌이로 인해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따라 EU를 생활공동체 수준으로 발전시킨 유럽통합 향방의 불투명성 고조
- 브렉시트 여파로 EU의 불안정성이 분출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유럽 난민 위기는 EU 내분과 위기 확대를 초래

【 미·러 간 시리아 휴전협정 난항 】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확대되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정부군과 반군간 일시적 적대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물자 지원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을 반군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내용의 임시 휴전에 합의

○ 임시휴전으로 알레포에 찾아온 평화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기지 오폭사건과 러시아의 알레포 동부 공습으로 중단

- 2016년 10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시리아 내전 휴전 협정이 진척없이 종결됨으로써, 폭력은 더욱 확산

【 파리기후협약 출범과 신기후체제 수립 】

○ 2016년 196개국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약 발효(11.4.)가 가져다 준 신기후체제 수립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

○ 파리협정 이행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11.7~18, 모로코 메라케시)에서 '행동총회(COP for Action)로서 마라케시 행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

***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유세기간 파리기후협약 파기 의사를 공공연하게 천명**

【 4차·5차 북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 채택 】

○ 북한의 4차 핵실험(1.6) 및 미사일 발사(2.7)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으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행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실행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9.9) 강행은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인권문제 부각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강화를 초래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11.30)됨으로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는 효과 거양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역내갈등 심화 】

- ASEAN 정상회의(9.6~9, 라오스)가 역내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PCA 판결의 영향과 해법 도출이 모색되고 있는 와중에 개최

- ASEAN 정상들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 남중국해에서의 인공매립(land reclamation)에 대한 우려와 역내 신뢰구축의 손상 가능성을 표명

▢ 미국

【 정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

- 11월 8일 실시된 선거 결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를 앞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 연방의회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2석, 하원 435석 중 238석을 차지하여 행정부와 연방의회를 공화당이 모두 석권

-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격전지로 꼽혔던 플로리다를 비롯하여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불리는 쇠락한 중부 공업지대인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까지 승리하여 백인 저학력·저소득층을 공략한 선거 전략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

-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승리연설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과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함께 일하고 이 위대한 나라를 통합” 할 것을 천명
  - 대외 관계에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나라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 밝혀,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과 국가별로 선별적인 대우를 할 것임을 시사

【 연방 의회내 지한 및 친한파 의원들의 엇갈린 운명 】

-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지한 및 친한파 의원들의 당락이 엇갈리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대의회 채널 축소
  -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던 민주당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과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민주당 로레타 산체스 하원의원 낙선
  - 반면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이며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서온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코리아 코커스 회원인 공화당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존 부즈먼 상원의원은 의회 입성에 성공
  - 이번 선거에서 신고립주의적 여론이 득세하면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인 까닭에 민주당내 지한 및 친한파 의원들의 성적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당선자 취임 후 선결과제 발표 】

- 트럼프 당선자가 현지 시간 11월 21일 유투브를 통해 발표한 무역·에너지·규제·안보·이민·공직윤리 등 6개부문 정책 계획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워싱턴 기득권 개혁에 초점
  - 주요 추진 내용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 돌입,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 체결, 이민 제한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 개혁, 사이버 테러 대비책, 워싱턴 로비스트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언급

- 트럼프의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된 정권인수위 내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트럼프의 정책이 바뀔 것을 우려하는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행보
  -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이민자 추방,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제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등은 언급하지 않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 될 전망

【 미국내 사회적 갈등 및 안보 불안 확산 】

-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인종 차별, 종교 차별,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일삼은데 대한 반발로 트럼프당선 불인정(Not My President)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
  -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불법이민자 200만 명을 추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남미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불안감 확산

- 수차례 반복된 경찰에 의한 비무장 흑인 사살이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을 확산시키며 백인들과 유색인종들 간의 인종갈등 심화

*** FBI 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이슬람을 향한 증오범죄는 약 67% 증가하였으며, 종교 및 인종차별에 의한 범죄 등 각종 증오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부빈곤법률센터(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통계에 따르면, 이런 각종 증오 범죄 증가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었음

○ 1월 7일 펜실베니아에서 경찰관을 향한 총격을 시작으로 플로리다 나이트 클럽 총격 사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한 경찰을 향한 총격사건 등 '외로운 늑대'(Lone Wolf) 형태의 미국내 자생적 테러 사건이 지속적 발생

- 특히 선거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압력솥 폭발물과 파이프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뉴욕에서는 29명의 사상자 발생

【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도 '아시아 회귀' 정책 행보 지속 】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2차 대전 중 원폭이 투하되었던 일본 히로시마를 원폭 투하 71년 만에 방문

-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서 '핵 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히로시마 박물관 방명록에 세계가 용기를 가지고 모두 함께 평화를 전파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 남김

○ '아시아회귀' 전략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상 스카보러암초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유권 주장에 근거 없음을 판결내린 것을 계기로 중국에게 '항행의 자유' 인정을 지속적으로 압박

【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전환 】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의회에서도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태도 전환

-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제재 이행안' (H.R. 757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이 미 연방하원을 재석인원 420명에 찬성 418명으로 통과되었고 연방상원은 재석 인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2월 10일 통과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제재 이행안'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3월 16일 행정 명령을 통해 북한의 국외노동자 송출 행위 제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온 대북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평가

  *** 미 재무부는 이날 새로운 행정명령에 맞춰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

- 미 재무부의 북한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 발간 및 대북 인권제재안 발표 등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압박 수위 계속 상승

▢ 중국

【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 】

○ 시진핑(習近平) 주석 1인 권력체제 강화 추세 속 향후 권력체계 변동 가능성 대두

- 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 에서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공식화

- '핵심' 지위의 부여는 집단지도체제라는 현행 시스템의 수평적 정책 결정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시진핑 개인이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핵심'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했다고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

***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과거 1인 지배체제에 따른 폐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서 개혁개방시기 중국정치의 전통과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제도임**

【 경제정책을 둘러싼 지도부의 내부갈등 노출 】

- 금년 상반기 시진핑과 리커창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논란이 표면화
  -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시진핑 세력과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는 리커창 총리 사이의 갈등이 자주 거론되었음
- 금년 5월 <인민일보>는 '권위있는 인사'를 내세워 리커창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시진핑도 직접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현행 경제정책을 비판

*** 중국은 그동안 경제 운영을 총리에게 맡긴다는 관례가 있지만, 시진핑은 본인이 당내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음으로써 이러한 관례를 수용하지 않았음**

【 6%대 경제성장의 지속 】

- 중국의 2016년도 경제성장률은 6.5%선에서 달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정부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2020년)을 위해 잡고 있는 성장률 마지노선

- 중국은 13·5 규획(2016-2020) 원년인 금년에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온중구진(穩中求進)'과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집중했으나 실질 성과는 미지수

- 금년 봄에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지표는 유동성 공급에 급제동이 걸리자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의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후퇴

*** 중국정부로서는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 더불어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정책과 구제 금융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금년에도 반복**

【 사해문제(四海問題)의 딜레마 봉착 】

- 2016년 중국의 대외관계는 남중국해문제(南海), 동중국해문제(東海), 양안관계(台海), 사드문제, 북핵문제(黃海)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

  - 이른바 중국의 외교는 '사해문제(四海問題)'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던 것이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중국의 의도대로 뚜렷한 개선이나 진전을 보인 사안은 없었음

- 특히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국은 남중국해 9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7.12)로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명분이 심각히 손상

【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심화 】

- 2016년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7.8)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수교 이래 한중관계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

  -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고도의 '여론전', '심리전'을 펼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으로 압박하였고, 한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라는 이름으로 보복 가능성을 위협

- 중국은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중 국방 분야 교류를 연기 또는 중단했으며, 한·중 국책연구기관 전략대화를 중단하고, 비자발급 조치도 강화하는 등 부분적으로 공세적 조치를 단행

○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력한 압박은 ▲사드배치 철회 ▲사드배치 연기 ▲한국의 미국주도 MD체제 편입 억제 ▲한국의 일방적 미국 경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은 내년 8월 이전 배치 완료를 천명**

【 G20 정상회의 개최 및 국제영향력 확대 】

○ 중국은 작년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금년 9월에는 항저우(杭州)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제고

○ 중국은 시진핑과 리커창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상하이협력기구회의(SCO),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담과 양자 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존재감을 부각

- 특히 리커창은 금년 9월 유엔 총회에 데뷔하여 국제질서와 개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총리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여 미국·쿠바 수교를 견제

▢ 일본

【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정권의 안정적 정국운영 확보 】

○ 아베정부는 7월 10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안정적 정국운영 기반을 확보

- 2018년 9월까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안정적 정국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아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 성공 가능성도 증폭

○ 10월 5일 자민당 당규를 현행 재임에서 3선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최장 2021년 9월까지 아베의 총리직 연장 가능

- 중의원,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고 자민당 당규 개칙으로 아베 총리 주도의 안정적 정국운영 확보
- 집권 이후 50% 정도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

【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 감소 】

○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 감소로 인한 아베노믹스 퇴조 기류 확대

- 작년도 대비 엔고 영향으로 상반기 경상 이익이 13% 감소 되었고 엔고 영향을 많이 받은 전자기기,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두드러지게 감소

○ 아베 노믹스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던 높은 취업률도 비정규직 증가율을 반영하고 있고 전체 고용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까이 이르고 있어 '비정규직 사회'로 급변했다는 평가

【 미일동맹 강화 및 주변국과의 안보강화 정책 추진 】

○ TPP 참가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주도의 동아시아 질서에 동참하는 정책을 추진

- 미일동맹의 안보 및 경제영역의 확대는 동아시아 내 중국과 일본 간 갈등구조 심화와 중국의 북핵제재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안보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위대 훈련 시작 및 임무의 확대

- 2015년 9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에 시행된 안보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 훈련이 8월 28일 시즈오카현 고텐바에서 실시

*** 이번 자위대 공개사격 훈련에는 자위대인원 총 2천 4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실탄 약 36t 사용**

○ 8월 25일 동경에서 이나다 방위상과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이 만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 일본·호주간 안보협력 강화

-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따른 중국의 견제 측면도 있으나,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따른 주변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평가

【 아베내각의 대러 적극적 외교와 중일관계의 갈등양상 고조 】

○ 러·일 경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양국관계 진전 양상

-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회담을 진행
- 북방영토 해결 및 평화협정 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이를 위한 경제협력이 추진되면서 미일동맹과 별도로 일본의 독자적 외교노선 추진으로 평가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일관계 갈등 가시화

- 일본의 국제적 위상확보 및 중국의 부상 견제를 위한 동남아 순방외교를 포함한 적극적 외교를 실시
- 예상을 넘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및 안보강화는 일본으로선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

【 한일관계 개선과 북핵대응 공조체제 마련 】

-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 합의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의 악화는 있으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합의라는 점에서 평가되며, 작년 대비 혐한기류도 축소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따른 한일 대북공조체제 마련
  -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4년 만의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23일 서명
- 연이은 북핵실험과 SLBM 발사로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대북제재 강화

【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지속 】

- 총리 주도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
  - 북핵 문제와 달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간헐적으로 유지
-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협상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북일관계 개선의 여지는 상존

▢ 러시아

【 집권당 통합러시아의 총선 압승과 푸틴의 정치권력 체계 공고화 】

- 러시아는 9월 18일 제7차 '국가두마' 선거를 치렀으며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이 54.18%를 차지해 총 450석 가운데 개헌선을 넘는 343석(76%)을 확보, 푸틴은 대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도전자 없는 패권적 권력체계를 구축

* 러시아 의회는 聯邦議會(상원)와 국가두마(하원)의 양원제이며, 후자의 경우 정당득표비례 및 지역구 별로 각각 225명씩, 총 450명으로 구성

○ 금번 러시아 총선은 완전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출의 혼용 방식을 다시 도입한 첫 번째 선거로, 2012년 출범한 푸틴 집권 2기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었으며 2018년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가늠하는 단초의 성격도 내포

* 총 450석중에서 통합러시아 343석, 러시아공산당 42석, 자유민주당 39석, 정의당 23석, 여타 정당이 3석을 획득.(www.cikrf.ru)

【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하 경제 침체 상황 노정 】

○ 경제적 측면에서는 서방측의 對러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대체 산업 육성, 선도개발구역 지정 등을 통한 외국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경제 침체 상황이 지속

* 2015년 경제성장율 -3.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8월간 -0.7%로 약간의 회복세를 표출

【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외교 추진과 국제현안의 주요 행위자로 부각 】

○ 러시아는 2016년도에도 세계전략 구사, 대미라이벌 인식과 세계질서 주도국 인식, '부활한 러시아' 입장에서 대국주의,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외교노선을 전개

○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측의 대러 제재에 맞선 가운데 시리아 내전에의 개입 확대, 미국과의 플루토늄 폐기 협정 잠정 중단, 발틱함대 증편 등 미·서방측과 대립각을 세우며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각

○ 특히 푸틴 대통령은 '新푸틴독트린'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 이란 핵문제 해결, 경제포럼을 통한 외국 투자 유인, BRICS, SCO 정상회의를 통한 다자간 외교 전개 등 국제적 위상 제고에 진력

【 미-러 갈등 심화, 중-러 발전 지속, 러-일 협력 모색 】

○ 미러관계는 2012년 5월 푸틴의 재집권 이후 갈등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미국 대선과정에의 러시아 사이버 개입 논란, 미국의 동구권 MD 구축 움직임에 따른 칼리닌그라드에 전술핵 배치 등 미러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

- 한편 11월 9일 러시아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러 갈등 양상에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

○ 러중관계는 9월 G20 정상회의와 10월 BRICS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푸틴-시진핑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전략의 연계와 일대일로, 유라시아경제연합간 연계 협력을 심도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 러일관계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월 소치, 9월 블라디보스톡, 12월 야마구치 등 세 차례에 걸쳐 양국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영토 문제에 있어 전향적 검토 및 일본의 대러 경협을 크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

*** 아베 총리가 2017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공언하고, 양국이 장관급의 상대국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긴밀한 관계 구축 노력**

【 한·러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개최와 관계 재도약 도모 】

- 한러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24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푸틴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 정례화 노력 지속

-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는 △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의 시현과 전략적 소통 강화 합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동력확보, △ 사드배치에 대한 러측 불만 무마와 대북 제재에의 협력 확보, △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프로젝트 참여 토대 마련,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 추진 기반 마련, △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비전과 방안 제시 등으로 집약

- 반면에 △ MOU체결 사항의 실천 등 후속조치작업 만전, △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 사드,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잠재적 갈등 사안의 관리, △ 추후 정상회담 준비과정시 폭넓은 전문가 견해 수렴 등이 과제로 잔존

- 반면, 경제 교역 부문에 있어서는 2013년 226억 달러(한국 비중 10위), 2014년 258억 달러(12위), 2015년 160억 달러(23위)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도는 9월 현재 95억 달러(22위)를 기록해 지속적 감소 추세를 시현

【 러시아의 대북 제재 참여와 북·러관계 답보 상황 지속 】

- 박명국 외무성 부상의 방러시(16.1)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 인도적 지원, 나진~하산 물류 사업의 진행 등이 이뤄졌지만, 전체적으로 북러관계는 북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큰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를 지속

-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지만, 북한의 붕괴 또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정도로 관리하면서 북핵 관련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외교적 해결, 6자회담 재개'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

2. 2017년도 전망

▢ 국제정세 일반

【 미국의 안보현안 조정, 보호주의 강화 및 통상마찰 심화 】

- 2017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對NATO 관계 등 동맹관계 조정, 대외원조 축소, 국제무역협정 파기 등 글로벌 질서에의 영향에 관심이 증대

- 미국 신 행정부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NAFTA, FTA 재협상 등 경제무역 관계 변화 불가피 및 세계경제 질서에 있어서 보호주의 경향 강화는 자유무역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국가와의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 파리기후협약을 둘러싼 갈등 및 기후외교 과제 부각 】

-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공식 비준하는 등, 파리기후협약 타결의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트럼프 신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백지화 움직임에 따라 미중관계 및 선·개도국 간 갈등 현안으로 부상

- 2016년 11월 마라케시 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의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하는 등, 파리기후협약도 교통의정서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 여부가 문제되는 가운데 2018년까지 진행될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

【 브렉시트의 정치 및 경제적 파장 】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시장 접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고용, 내구재소비 등 중장기적 의사결정 유보 가능성으로 내수 침체, 미국과 일본은 2016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유로존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브렉시트 관련 중요한 이행조치는 2017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급락 및 영국내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급증 등 부정적 여파로 인한 영국내 여론도 의회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17년 프랑스 대선 및 독일 총선 여파 】

- 2017년은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에게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 해가 될 것인데, 메르켈 총리는 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국내 지지율 하락 상황 우려

-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출범을 계기로 트럼프에게 파리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메르켈은 국내지지율 획득을 위하여 테러 위협과 난민사태에 대한 EU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내 극단주의 정당의 反이민 및 反EU 주장이 지지를 얻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

【 이란 핵 합의 및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중동질서 불안정성 증대 】

- 이란 핵 해결 후속조치 이행 관련 쟁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란 핵 합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트럼프 신 행정부는 합의안 파기 등 핵합의 재검토 전망

- 시리아 내전 초기 정치적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결과, 2017년에도 실효적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시리아 사태의 비극 지속 및 이로인한 중동질서 불안정성 증대

【 미국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동북아역내 질서 재편 】

- 무역분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드 배치 등 미중 간에 갈등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트럼프 대선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역내 새로운 질서 재편에 관심 집중

-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의한 미국의 동맹관계 변화도 불가피해짐에 따라 동북아역내 안보 지형에서의 변화 가능성 주목

【 미국의 대중견제로 인한 미중갈등 지속 및 관계 재설정 】

-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무역관행, 남중국해 영유권, 사드 문제, 환율, 지적 재산권, 산업스파이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전망

- 기존 미중관계의 발전적 파트너십과는 다른 차원의 '제로 섬' 적인 통상정책 및 경제분야 압박을 통한 미중관계 재설정 가능성

▢ 미국

【 내년 상반기 신정부의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 】

- 트럼프 당선자는 정권인수위(Transi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향후 4년간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어갈 공직자에 대한 인선작업에 들어갔으며, 언론에 거론된 일부 인물들의 성향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갈등 악화 가능성 전망

○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렌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가 중동지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

【 미국과 나토(NATO)와의 관계 재조정 과정에서 결속력 약화 가능성 대두 】

○ 트럼프 당선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중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만이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 2%의 납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자신들도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낼 여력이 있다”고 주장, 향후 나토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의무 준수 요구할 것임을 시사

-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 할 수도 있음을 언급

○ 나토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공격 감행, 쿠데타 실패 이후 터키 정부의 인권 유린 및 법치 훼손 등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방위비 증액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을 경우 나토의 결속력 약화 가능성 대두

【 트럼프 행정부하의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 관계 변동성 증가 】

○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기간동안 푸틴 러시아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해온 바, 향후 두 지도자의 관계에 따라 양국 관계 및 시리아 사태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 일각에선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맞아 그 동안 대선 결과를 주시하던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터키와 함께 시리아 개입수위를 높이며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음

- 터키가 시리아 내의 쿠르드 족 반군과 터키의 쿠르드 족 세력과의 연계 차단 목적으로 러시아와 협력 수위를 높일 경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관계 지속 가능성이 있음

○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공존

- 비관론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질서 문제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안보 문제로 제기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200일 계획'(First 200 Days Plan)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음

- 낙관론자들은 미중이 경제문제에서 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이념적, 가치관적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제에 합리적 해결책을 찾으면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다는 시각 표출

【 한미 관계의 제 영역에서 재조정 가능성 대두 】

○ 한미관계 차원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동맹 조정, 한미 FTA 재협상 등이 현안으로 제기될 전망

- 주한미군 철수, 독자적 핵무장 허용 등 트럼프 발언에 비춰보아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시범 사례로 삼을 가능성 있고 전작권 이양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 가능

○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TPP 탈퇴 추진을 선언하면서 양자협정을 강조한 바, 향후 한미 FTA 협정 재조정 및 대미교역 흑자 폭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정책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미 재무부는 4.29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대만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환율감시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향후에도 한국정부의 환율정책에 지속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견됨

【 미북 관계 불확실성 증가 】

○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라고 지칭하면서도 김정은의 수권 능력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뉴욕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일관되지 않은 인식을 보여 향후 정책 전망 불투명

- 트럼프 당선자는 핵문제에 있어서도 협상을 통해 핵포기를 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 인식을 드러냄

○ 반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트럼프의 주변 참모들은 대북 강경파들로 향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이들의 영향력이 발휘될 경우 미국은 대북강경책 구사 가능성도 있음

▢ 중국

【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세력투쟁 가열 】

○ 2017년은 중국정치의 재설정(resetting)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수면 하에서 치열한 세력다툼이 전개 예상

- 매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대회는 중국정치 전반에 대한 '물갈이'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내년 당 대회에서는 현 정치국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5명이 물러나야 함
- 중국은 내년 가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을 위해 대내적으로 엘리트 그룹 내에서 권력투쟁이 한층 가열되는 한 해가 될 것임

*** 누가 정치국상무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인사이동과 그에 따른 조직과 정책변화를 고려하면 내년 당대회는 대내외적 초미의 관심사일수밖에 없음**

【 19차 당 대회 관전 포인트 】

○ 내년 가을 19차 당 대회를 평가 및 분석 하는데 핵심이 되는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전망

- 첫째, 당대회 개최시점에 68세이상 간부는 은퇴한다는 '칠상팔하'의 묵계가 내년도 당 대회에서 유지될 것인지 여부로 이는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의 정치생명 연장 여부와 직결
- 둘째, 현재 7명으로 되어있는 상무위원의 수가 지금처럼 7인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으로서 이는 평소 시진핑이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도를 강화해 왔기 때문
- 셋째, 19차 당 대회에서 과연 '6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 출생 정치인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 '시진핑 이후'의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여부

***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덩샤오핑 사후 총서기직을 두 차례만 연임하는 관례를 깨고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바, 내년 당 대회에서의 인선 및 구조변화가 초미의 관심사**

【 시진핑의 정책 집행능력 강화 】

○ 내년도 중국 국내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칭호를 부여받은 시진핑이 더 강력해진 정책집행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이른바 '뉴 노멀(新常態)' 시기에 저성장을 감내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시진핑의 1인 권력집중체제 구축이 경제 분야 개혁과 구조 조정 동력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
- 다만 내년에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 가능성 등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시에 표출될 경우 시진핑의 지도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일 시진핑주도의 정책집행능력이 약화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금년도 실적을 하회한다면 중국경제는 당분간 회복으로의 전환보다 저성장의 장기화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음**

【 전반적 외교안보상황의 불투명 】

○ 내년에 중국의 외교 안보가 직면하게 될 전반적 상황은 금년에 비해 결코 낙관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남중국해문제, 동중국해문제, 양안관계, 사드문제, 북핵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사안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
-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이후 남중국해문제는 일견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존재
- 중국은 내년에도 이른바 '사해문제(四海問題)' 딜레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느냐가 중요한 외교 과제로 등장할 전망

【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및 마찰가능성 대두 】

- 내년도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경우 오바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재균형정책(Rebalancing)'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정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 정책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트럼프는 무역관련 "중국이 미국을 강간(rape)하고 있다"거나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중국 인식에서 파격적인 면을 드러내지만 구체적 정책은 불투명
  -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 캠프에 중국 전문가 그룹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노선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내년도 미중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 중일관계와 미중관계 연동화 】

- 내년도 미중관계가 대립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2017년의 중일관계 역시 미중관계와 동조화(coupling)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외교는 미일동맹을 기초로 하며 아베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하는바,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의 기초 위에서 수립된 것임
  - 그러나 오바마의 유산인 재균형정책과 TPP 등에 대한 조정과 포기를 선언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아베정부의 대중국정책의 기초를 흔들어놓을 수 있음
  - 중국 역시 아베정부가 추구하는 군사력 증강 및 미일동맹 강화, 헌법 개정 등의 움직임은 전략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도 이러한 양국간 불신과 마찰은 지속될 가능성

【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 희박 】

- 내년도 한중관계 역시 사드배치, 북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관계 개선보다는 대립과 불신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으로 한·중 국민들 사이의 감정대립이 격화되기 쉬운 상황에서 내년에 사드 배치가 실현된다면 한중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럴 경우에 중국으로서는 그 동안 한국에 대해 취하던 고도의 심리전과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상응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완료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년도 한중관계는 결코 금년보다 낙관적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국내정국으로 인한 외교·안보 관련 리더십의 공백 상태도 변수

□ 일본

【 아베총리의 장기 집권화 및 개헌을 위한 여론형성 】

- 내년 초 중의원 해산과 총리 3선 연임 가능성이 증대
  - 50%를 육박하는 안정적 지지율과 지난 10월에 있었던 보궐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조기 중의원해산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개헌에 필요한 국민적 동의를 위한 여론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안정적인 아베 정부의 지지율과 국회에서의 개헌 발의 요건이 충족되어있고, 중국 및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확대를 배경으로 개헌이 가시적인 사정권 내에 있다고 판단

* 아베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인 9월 26일 소신표명을 통해 개헌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 개헌은 중의원, 참의원 각각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찬성하고 또한 국민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가능

- 다만, 국민적 반대가 여전히 남아 있고 개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민심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연내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동북아 안보상황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임

【 아베노믹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경제정책 실시 】

○ 민심을 잡기 위한 경제정책에 총력

- 아베 노믹스에 따른 주가 상승과 취업률 증가 등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나, 국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
-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지방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보다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

-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보호주의 무역정책 및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 공약 등은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아베노믹스 정책 시행과 성과 도출에도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미·일동맹 재확인을 위한 외교 노력 강화 】

○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과의 외교 안보 및 경제협력을 위한 라인 구축

- 트럼트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일본에게 경제 및 안보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베정부는 미일동맹과 엔고현상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라인 형성에 주력

○ 미일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

-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핵 무장까지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의 대일 외교방침은 향후 미일동맹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시아중시 전략도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미일동맹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다만, 북핵문제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는 남아있어 당분간 동아시아 정책의 기본 노선은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

【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일관계 갈등 고조 】

○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해역항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은 보다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지역에서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은 중일 갈등관계 심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주력

【 북핵 위협 관련 한일협력 관계 진전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 증대 가능성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따라 상호간 정보공유 및 보호를 통해 효율적 대북공조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협정체결을 둘러싼 한국 내 반발 여론으로 인해 일본은 향후 한국정세에 주목

○ 교과서 검증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간 장기적 갈등요인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

-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견해 및 집권당인 자민당 우익보수 세력의 돌발적 행동들이 갈등요인으로 작용
- 특히, 4월 27일 동해표기 관련 국제회의(19회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동해 및 독도문제가 다시 한일 간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음

【 제재와 대화 병행하는 북·일관계 】

○ 아베 총리는 여전히 '납북자문제 해결없는 북·일 관계정상화 없음'이라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바, 혁신적인 북·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아베 3차 내각에 들어와 북한 도발 대응방안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가 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히려 이 점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대북제재는 강화되나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지속

- 일본은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나, 이에 대해 북한은 내부사정으로 일본의 요구 수용이 어려움

▢ 러시아

【 푸틴의 대내권력 공고화와 공세적 국가발전 전략 추구 】

- 푸틴 대통령은 80%에 이르는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대내 애국주의 열풍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정보 기관의 확대개편, NGO의 활동 견제, 차세대 인물의 발굴 배치 등 푸틴식 대내 권력 공고화 작업을 적극 추진

- 나아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동방경제포럼, 소치경제포럼 등을 통해 미래 국가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정책의 정립, 외국의 러시아내 투자 유치 노력도 전개

【 중동, 유럽 등 국제질서 재편에의 적극 개입 및 위상 제고에 진력 】

- 전년도와 같이 신푸틴독트린과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측의 對러 제재 해제와 효과 상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협력 강화, NATO 동진에의 군사적 대응, CIS에 대한 영향력유지, 시리아 내전에의 개입 강화, 중러관계 지속발전 도모 등을 통해 EU, 동유럽, 중앙아,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정치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조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모색 및 초국경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 】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러 정상회담 개최등 오바마 행정부 시기동안의 미러관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 관계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

- 나아가 UN에서의 역할 제고 및 BRICS, SCO, G20, APEC, EAS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슬람국가(IS) 퇴치, 식량안보, WMD 확산 방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초국경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처

【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및 잠재적 긴장 관리 】

- 2017년 한·러 수교 27주년 및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치러질 예정

-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톡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4건의 MOU를 포함해 제반 경협사업의 후속조치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

- 반면에 한·러 간 신뢰 저하 및 관계 답보, 무역고 감소, 사드 배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이견, 대북 제재 이행 문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 등은 한러관계의 잠재적 긴장 요인으로 작용

- 푸틴정부는 남북한 균형 접근의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기업 투자 유인, 나진~하산 물류프로그램 재가동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

【 북·러관계 답보 상태 탈피 노력과 전략적 지렛대로의 활용 】

- 푸틴정부는 크림반도 병합에의 지지 확보, 대미, 대중, 대한 견제의 전략적 지렛대 활용 등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안보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대북 접근 강화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하에 북핵 불용의 입장 견지 및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강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판 등 양비론적 입장도 지속 견지

- 이밖에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 지속, 축전 교환, 문화, 예술, 관광 부문의 활성화 및 양국 간 경협, 무역고 증진도 추구할 것으로 예상

3. 정책적 고려사항

【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른 기후정책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검증체제 확립은 물론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기후정책 추진이 긴요

- 신기후체제의 국제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녹색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의 여건을 마련,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 확보

【 ASEAN 정상회담 관련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 대응 】

- ASEAN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주장을 거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행위에 대한 우려 표명 선에서 절충

- 남중국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도 주목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외교적, 전략적 대응 방안들을 신중하게 모색

【 미국 행정부 및 연방의회내 지한파 네트워크 구축 필요 】

-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과정을 주시하면서 당선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문제에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씽크탱크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친한 및 지한파 연방의원들의 잇따른 낙선으로 의회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창구 마련 필요

【 한미 관계 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 】

- 안정적 대미 관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차원 TF를 구성, 상황점검 및 방위비 분담증액, 전작권 조기전환, 북핵해결, 미·북 대화 등 한·미 관계에 관련한 제반 사항 점검
  -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은 2018년까지 적용돼 차기 분담금 협상은 2017년말에 개시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될 여지도 충분하므로 차분한 대응 필요

-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경제부처와 국내 기업 공동으로 민관기구를 설치하여, 미 신정부 출범 후 미측이 제기할 수 있는 한미FTA 관련 통상현안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응방안 마련

-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등 동맹의무 방기 조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주국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양자 동맹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자동맹의 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북핵 문제에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부여 유도 】

- 북핵문제 해결에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도록 사전 조율하는 노력이 긴요

- 미국이 협상, 제재, 억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문제해결에 나서도록 트럼프행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긴밀히 사전 협조

○ 한편 트럼프 당선자의 협상력 과시의욕으로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 공약 없이 핵동결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거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평화협정 카드를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 노력이 필요

【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

○ 미국 신행정부 등장, 유럽선거, 남중국해 갈등, 한중 사드 문제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對韓 파급영향에 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필요

-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는 특정국가간 대립이나 또는 특정사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 내에서의 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 요인 및 갈등사안에 대한 세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추구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민감도 제고를 통한 사전 분석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자문 및 협의 채널 구축

【 사드 갈등 심화에 따른 한중관계 대비 】

○ 2017년 사드 배치가 실현될 경우 한중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바, 건전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비 필요

- 중국은 사드배치가 한국 안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란 점을 이해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바, 사드 관련 한·미·중 3자 대화를 모색

-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듯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당하고 원칙있는 자세로 일관된 우리의 주장을 설파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 및 협력을 언제나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

  *** 사드문제로 인한 갈등이 한·중간에 불신의 구조로 정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동시에 중국의 압박조치가 고조될 것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필요**

【 북중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 】

○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을 과장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하고 전통적 세력균형을 시도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한국의 외교안보적 취약점이 북한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우호관계 회복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외교를 곤경에 빠뜨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대북접근에 북한이 호응하여 북중관계가 개선될 경우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대응책을 준비**

【 아베총리의 헌법개정 동향 주목 】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헌법개정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사항이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일본측 동향에 주목해야 함

○ 아베 총리의 최장 2021년까지 장기적 집권이 예상되는 바, 역사왜곡에 대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사안에 따라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미일동맹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 미일동맹의 변화는 한국 안보에도 큰 변수로 작용
  -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증가 및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 핵무장론 등은 한국의 안보 및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향후 미일동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한국의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

-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대한 국익 우선 전략 필요
  - 한국은 안보문제를 위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對日 견제적 성격을 활용,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

【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80주년 행사 지원 】

- 2017년은 1937년 소연방거주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 학술회의 등 국내외에서 각종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원 긴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정례화 】

- 블라디보스톡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북핵문제 관련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한 바,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국가안보 회의 간 전략대화 정례화 검토

*** 2015년 9월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訪韓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국가안보실장의 訪러 검토**

- 1.5 트랙의 한·러 전략대화의 재개, 2+2(외교+경제) 전략회의 개최도 검토

【 러시아 의회지도부 초빙외교 및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성공 개최 】

- 9월 18일 치러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서 기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볼로딘 하원의장 선출 등 의회 신지도부가 출범
- 한·러 의회 간 의원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상·하원의장 등 초빙 외교를 전개
  - 한·러는 모스크바에서 제1차 유라시아국회의장 회의를(4.19~20)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의 성공적 개최 긴요

【 한-러 양자 경협 합의 사안의 발굴과 구체적 실천 】

- 남북관계 경색 환경을 감안, 기존 남북러 3각 경협의 틀을 대체하는 한·러 양자 경협 프로젝트의 발굴과 활성화 도모
- 특히 금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21개의 경제 관련 MOU의 세부 실천이 중요

【 북극항로 개척 등 유라시아 진출 협력 모색 】

- 북극해역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를 비롯해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확대해 나가는 등 향후 북방물류 개척의 측면에서 한·러협력 강화

【 對러 공공외교의 지속 전개 】

- ‘루스키 미르’등 최근 러시아의 對韓 공공외교 전개에 조응하는 한편, 차세대 친한파 육성, 한류를 통한 역사와 문화 부문의 상호 이해 제고 등 한국 나름대로의 對러 공공외교 지속 전개

Ⅳ

2016년도 신안보분야 평가와 2017년도 전망

1. 2016년도 평가

▢ 대테러

【 쇠퇴국면에 돌입한 IS, 테러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확산 】

- 시리아·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반군, 미국 등 국제지원군 그리고 러시아군 등의 공세로 시리아·이라크 지역내 영토의 약 30%를 상실하고 원유 판매 수입 등도 급감, IS는 쇠퇴국면에 돌입
  - IS가 장악한 지역은 9월말 기준 6만5천㎢(스리랑카 영토 규모)로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했던 2015.1월 대비 28% 가량 축소

- 그러나 IS와 그 지지자들은 시리아·이라크점령지 축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터키·방글라데시 등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대형 테러를 감행, 오히려 IS의 건재를 과시
  - 3.22일 벨기에 브뤼셀 자벤템 국제공항 및 도심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해 34명을 살해하고 202명을 상해
  - 6.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총격전과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45명을 살해하고 238명을 상해
  - 7.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국 공관 밀집 지역 음식점에서 무장 인질 테러를 감행해 외국인 18명 등 민간인 20명을 살해
  - 8.20일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야외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해 51명을 살해

【 서방세계內, IS연계 자국민이 감행하는 자생 테러 빈발 】

- 올해 발생한 주요국 테러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테러리스트가 미국·유럽 지역에 잠입·감행한 테러사건도 있지만, IS나 알카에다 등의 선전물에 세뇌된 회교권 출신 자국인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자생 테러도 빈발
  -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는 아프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이 게이바에서 6.12일 총기를 난사해 민간인 50명을 살해하고 53명을 상해
  - 뉴욕시 맨해튼 남서부 첼시지역과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에서는 알카에다에 심취한 아프간 출신 미국인 아마드 칸 라히미도가 압력밥솥을 이용해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9.17일 감행
  -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는 튀니지계 프랑스인이 대형 트럭을 이용한 테러를 7.14일 감행, 86명을 살해하고 434명을 상해
  - 독일 뮌헨의 쇼핑물에서는 10대 이란계 독일인이 7.22일 총기를 난사하여 9명을 살해하고 35명을 상해

- IS·알카에다 등 급진 이슬람 조직들에 동조하는 외로운 늑대형 추종자들에 의한 자발적 자생 테러공격이 IS가 직접 감행하는 테러보다 오히려 사전 포착이 곤란하고 더 위험

【 이슬람 이민자에 의한 IS 추종 테러 공격 발생 】

- 테러 안전국가로 인식되었던 독일에서 IS를 추종하는 중동 출신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살인 사건 등이 1주일 사이 3번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난민 등 이민자와 테러범 간의 구분이 곤란
  - 아프카니스탄 출신 10대 난민이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 통근열차안에서 7.18일 도끼를 휘둘러 관광객 5명을 상해

- 21세 시리아계 난민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 버스 터미널에서 7.24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상해
- IS에 충성을 맹세한 시리아 난민이 바이에른주 안스바흐 야외 음악 공연장 인근에서 7.24일 사제 자살 배낭 폭탄 테러를 감행, 15명을 상해

○ 독일 당국은 난민이나 난민들 틈에 위장 잡입하는 IS 조직원을 가장 큰 테러 위협으로 간주

- 유럽내 테러 청정국가였던 독일의 정보 당국은 2016.7월 현재 708건의 난민 테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에 연루된 용의자만 1,029명

【 국내에서는 테러방지법 통과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2016.3.3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테러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은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 그러나 국정원의 대테러수사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조사권만 인정, 외로운 늑대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 대응에는 역부족이라 개정이 필요

□ 난민

【 국제 난민의 증가 추세 지속 】

○ 2016.6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강제이주민(국내실향민)과 난민 수는 6천 530만 명으로 2014년 5천 95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지속

- 국가별 난민 배출을 보면, 시리아 490만 명,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소말리아 110만 명이며, 강제이주자 수로는 콜롬비아 690만 명, 시리아 660만 명, 이라크 440만 명임

- 난민 수용에 따른 문제로 유럽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전 세계 난민의 86%는 내전과 분쟁지역에 인접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수용

  - 최대 난민수용국인 터키는 250만 명의 난민을 보호중

-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15년 89만 명이 유입되었으나 2016년의 경우 9월까지 21만 3천 명의 난민이 유입, 연말까지 약 25~30만 명의 난민 유입을 예상

- 반면 지중해를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10월 말 현재 15만 3천450명으로 종전 최다였던 2014년의 17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

【 EU·터키 난민협정 합의로 EU 난민 유입의 감소 】

- 2015년 대비 2016년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데에는 무엇보다 2016.3월 발효된 EU와 터키간 난민협정이 주효하게 작용

- 同 협정에 따르면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의 망명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고 터키는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는 대신 EU는 터키 내 난민캠프의 증설 및 관리를 위해 30억 유로를 지원하고 2018년까지 30억 유로를 추가로 제공

- 난민협정의 결과 2015년 1~9월사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52만 명이었으나 2016년 동 기간에는 30만 명으로 감소

- 이로써 터키, 그리스, 발칸반도를 경유하는 소위 <발칸루트>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치안 부재 상태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난민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난민할당제를 둘러싼 EU내 갈등 】

- 2015.9월 EU는 회원국 각국의 인구와 경제력을 고려해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을 분배하되, 거부하는 회원국에는 할당된 난민 1인당 25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난민할당제를 도입
  - 시행 1년이 경과했으나 최초 목표한 16만 명의 난민 중 재정착한 수는 10%도 못 미침

- 헝가리의 경우 난민 할당제를 거부하는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실패한 이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개헌안을 시도했으나 부결되는 등 EU 공동의 난민정책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일부 동유럽 국가가 EU의 난민할당제 백지화를 요구하며 헝가리 편을 들자 독일은 할당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군이나 예산을 유럽 국경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

- 이런 상황에서 EU의 외곽 국경을 상시 감시하고 회원국간 연락 업무 조정을 위해 최대 1천5백 명으로 구성되는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가 발족(10.6)

【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분자의 잠입 사례 증가 】

- 2015년 유럽으로의 대량 난민 유입과 함께 테러단체 조직원의 잠입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었으나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음

- 2016년 유럽 각국에서 테러범의 수사과정에서 난민 신분으로 위장하여 잠입한 테러분자의 사례가 계속 확인
  - 2015.11월 파리 테러를 자행한 8명의 범인중 2명은 난민 신분으로 유럽에 들어온 것으로 2016년 확인
  - 2016.11.2일 베를린에서 흉기 테러를 계획하다 검거된 튀니지 출신 IS 테러리스트는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하여 독일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

- 유럽 유입시 테러단체 조직원이 아니라 난민이었으나 입국후 사회통합의 실패와 함께 단시일 내에 급격히 극단화되어 테러단체에 가입, 테러를 자행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독일 열차 도끼 테러, 음악축제장 자폭 테러, 검거후 자살한 공항 테러계획 용의자 등이 대표적 사례임

【 난민 수용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의 심화 】

- 2016년 쾰른에서 새해맞이 거리축제시 발생한 집단 성범죄사건, 음악축제장 자폭테러 등 난민이 저지르는 범죄와 테러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기왕의 反이민 정서를 자극

- 유럽 각국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 난민 수용 시설에 대한 방화 등 反난민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프랑스의 <국민전선>(FN),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같은 포퓰리즘, 극우주의, 反이민, 反EU 세력이 정치적 저변을 확대

- 미국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도 히스패닉 이민자에 대한 백인 저소득층의 반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국내 난민 유입의 증가세 지속 】

- 국내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현재 5,430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1994년 이래 누적 난민신청자수가 올해로 2만명을 돌파

- 국내 난민신청자의 40%는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신청한 것으로 신청기간 동안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로 인한 난민신청자의 증가도 상당 부분을 차지

- 난민 인정자는 2013년 57명, 2014년 94명, 2015년 105명, 2016년 9월 현재 30명으로 난민 인정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이유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2013년 6명, 2014년 539명, 2015년 194명, 2016.9월 현재 71명임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4년도에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

- 2015~2017년 3년간 90명 이내에서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중

  - 2015년 미얀마 재정착 난민 22명을 수용한 이후 2016.11.2일 미얀마 난민 34명을 수용

▢ 사이버 안보

【 중국, 「사이버안보법」 제정하여 자국內 인터넷 통제 강화 】

- 중국은 2016.11.7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 상무회의에서 自國內 온라인 규제강화와 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

- 同 법은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사이버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요 IT 장비에 대한 정부 인증 및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사이버 모니터링을 공개적으로 규정

- 외국 정부와 인권단체의 항의에도 불구, 중국 정부는 同법 제정으로 인터넷·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촉진되고 사이버보안 관련 사업도 향후 5년간 25%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 IS 사용 암호해독을 둘러싼 논쟁 심화 】

- 2015.11월 프랑스 파리, 2016.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131명과 31명의 민간인을 살상한 이슬람 테러조직 IS가 슈어팟, 텔레그램 등 단대단(end-to-end) 암호통신 지원 메신저 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 서방 정보기관들은 암호화 통신에 따른 사전 테러움직임 포착실패를 주장하며, 테러집단의 암호통신을 막기위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백도어 설치, 키 에스크로우 도입 등 암호기술 악용을 제한할 필요성 제기

  * 2016.3.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애국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안이 부결된 반면, 영국은 2016.6. '모든 인터넷 통신감청'이 가능한 강력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

○ 2015.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14명 사망, 22명 부상) 중요 증거품인 아이폰에 대한 법원의 잠금 해제 명령에도 불구, 애플社가 협조를 거부,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논란이 점화

【 한-미 사이버안보 공조·협력 체제의 진전 】

○ 2016.5.2일 韓(미래부)·美(국토안보부) 양국은 서울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9.17. 사이버위협대응력제고를 위한 '제1차 사이버안보 정책협의회'(워싱턴)를 개최

- 이에 앞서 2015.10.16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수사공조 및 군사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협력채널' 신설에 합의

○ 2016.11.2일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SCM)에서 사이버전 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동 사이버훈련과 교육을 강화키로 합의

【 북한의 국가 주요정보 절취 목적 사이버공격 급증 】

○ 북한은 대남 해킹조직을 증·개편하고 스마트폰 해킹, 정부 주요인사 대상 해킹메일 지속 유포, IT정보보호업체 침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공격을 수행

○ 탈북민, 보수단체 홈페이지 대상 해킹공격 및 국내 대기업 PC·서버 해킹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문서 절취를 기도하는 등 국가 주요정보 절취를 지속적으로 감행

○ 2016.3월 국방·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들의 스마트 폰에 대한 지향형 해킹, 2016.9월 국방망 해킹 등을 통해 고급군사기밀과 문자 메시지를

절취하고, 게임변조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2만 5천여 대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모바일 공격 심화

【 북한, 금융정보 탈취 등 사이버테러 빈번 시도 】

- 금융정보 탈취·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스피어 피싱, 워터링홀과 악성코드를 삽입한 이메일 배포 등 공격 기법을 다변화 하면서 특정 인사, 특정 기관의 공인 인증서·비밀번호 절취를 기도

-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 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탈취하여 인터넷 뱅킹·신용카드결제를 위한 금융보안망에 침투, 전산망 장악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테러 자행

- 또한, 북한은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3])을 악용,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대상 8,100만 달러 불법 인출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등 해킹조직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타개를 위한 외화 절취에 동원

  *** 삭제된 파일코드 분석 결과, 북한이 2014년 美 소니픽쳐스 공격시 사용한 코드와 유사**

【 북한, 사물인터넷을 융합시킨 진화된 공격 기법 구사 】

- 2016년 상반기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공격수법의 진화와 함께 핀테크 환경 성숙에 따라 모바일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몰 웨어를 확산 유포

- ICS(산업통제시스템)·SCADA(감시제어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지능형지속 공격(APT)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랜섬웨어 공격은 기존의 데이터 파괴에서 시스템 파괴형태로 진화

---

3) 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서울 메트로 일부 열차 운행 제어 시스템(TCC)에 네트워크 장애 유발, 원격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권한을 획득하려는 바이러스 공격도 발생

2. 2017년도 전망

▢ 대테러

【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對IS정책 대폭 변경 예상 】

- 트럼프 후보가 美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행한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미·러 공동 IS 격퇴 작전 추진 등 미국의 對IS정책에 큰 폭의 변화 예상
  - 오바마 행정부는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사실상 대리전을 수행

-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 실패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며 취임시 IS 섬멸을 강조해 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러가 국제테러에 공동 대응 가능
  - 2017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IS 격퇴 작전을 수행함은 물론, 각종 국제테러에 미·러가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 곤란

- 이에 대해 IS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아부 무하마드 알마크디시는 트럼프 당선으로 무슬림과 아랍 세계에 반대하는 미국인의 의중이 백일하에 공개되었다며 트럼프 집권이후 IS의 대미 테러 강화를 암시

【 영토적 소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IS에 의한 국제 테러 확대 】

- 군사 전문가들은 수개월 내에 IS의 수도인 락까와 모술의 함락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슬람 급진 칼리프 국가 건설을 추진하던 IS는 2017년 안에 물리적으로 소멸

- 그러나 영토적 기반이 사라져 소멸해도, IS는 알카에다와 같이 국제 테러세력으로 진화할 것이며, IS에 의한 테러공격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전망
  - IS의 물리적 실체가 소멸해도 테러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라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 IS가 영토를 상실해도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에 거주하는 IS광신 추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어
  - 테러리즘은 서방세계 시민사회의 삶속으로 더욱 깊숙이 스며들어 IS 연계 미국·유럽 자국민들이 감행하는 자발적 자생 테러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S에 의한 핵 테러 가능성 존재 】

-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급진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인 IS나 알카에다는 이교도 대량살상을 그들의 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9.11사태와 같은 대량살상에 적합한 핵무기 및 재래식 폭탄 획득 및 사용에 관심
  - 핵무기나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물질을 채운 더티 밤(dirty bomb)을 사용한 핵 테러리즘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으나
  - 알카에다는 실제로 핵무기 자체 개발, 다른 국가로부터 핵무기나 핵물질 탈취, 국제조직 범죄자들로부터 구매 노력을 지속

- 따라서 IS나 알카에다 등이 북한당국 등과 핵물질이나 핵무기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 곤란하며, IS가 드론을 이용해 더티 밤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국내에서 자생 테러, 발생 가능 】

- 2016년 발생한 미국과 서유럽의 테러 사례에서 비춰볼 때 내년도에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거주 이민자 및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밀집 거주 지역들을 형성, 국내에서도 자생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구축된 상태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등 무슬림 국가 출신은 현재 약 15만 명에 도달
  - 이중 내국인이 약 4만명, 외국인이 11만 명 수준이고, 그 대부분이 급진적 성향에 동조하기 쉬운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연령대

【 북한의 테러 위협 가중 】

- 북한은 2017년 대선 등을 겨냥해 남조선 적화통일전략 추진 수단의 하나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다방면에서 도발·자행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도발은 국가기간망·공공망·사설망 대상 사이버테러 시도, 해외체류 인사 납치, 국내 불순세력과 연계한 기간망 시설 테러 공격, 미정찰기·아군 항공기 격추 위협, 아군선박 선제 공격 등 다양

▢ 난민

【 IS 격퇴전 결과, 국제 난민의 급격한 증가 】

- 11.1일 이라크군이 IS가 점령하고 있는 모술 진입과 함께 시작된 탈환작전의 결과 UN은 최대 1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1.3일 현재 이미 2만2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탈환전이 지속될수록 난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모술 주변의 6만 명 수용 규모의 난민캠프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모술과 락까의 탈환전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동 지역을 탈출한 주민의 상당수가 이라크 국내 실향민으로 머물지 않고 이웃 국가들로 피신할 경우 2015년과 같은 대규모 국제 난민의 발생도 가능

【 난민 위장한 IS 전투원의 잠입 】

- 모술과 락까가 점령당하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전투원들이 대규모 국제 난민 행렬에 숨어들어, 대거 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잠입할 위험이 제기
-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기반을 상실한 IS는 이 지역을 벗어나 전세계에서 테러를 벌이는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이슬람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활동공간이 마련돼 있는 서유럽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이 난민으로 위장한 IS 전투원의 일차적 잠입 목표 국가들일 것으로 예상
- 현재 이슬람 난민 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동아시아에도 장기적으로는 난민으로 위장한 IS의 침투를 배제할 수 없음
  - 역내 국가들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가 이러한 잠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난민과 이주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 갈등 유발 】

- 선거 과정에서 3백만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결과 유럽에서도 反난민, 反이민을 내세우는 포퓰리즘, 극우 정당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

- 2017년 총선 혹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네덜란드(3월), 프랑스(4~5월), 독일(9월)에서는 포퓰리즘, 극우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은 유럽 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럽 국민정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는 난민 및 인도적 문제를 둘러싼 대서양 양안 간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는 이미 대선과정에서 미국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난민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독일에 대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 유럽 측에서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 자유와 기본권의 존중이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조건이 결부된 당선 축사를 보냄

【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 압력의 증가 】

- 한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 보다 많은 난민을 수용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 사회의 압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시리아 내전의 지속, 이라크 내 IS 격퇴전의 격화 등으로 인해 국제 난민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유입 압력도 거리상 근접한 유럽 지역보다는 낮겠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S심장부인 모술과 락까 탈환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 요구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난민 심사인력의 부족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 국내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재정착 난민제도의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지난 2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30여명의 난민을 수용할 예정

【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

- 외교부는 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16년 450억 원에서 2017년 848억 원으로 88% 증액

- 터키, 태국 등지의 난민캠프에 대한 시설, 교육,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사이버 안보

【 美·中간 '인터넷 주권' 다툼 심화 】

- 2016.11월 제정된 중국의 「사이버안보법」은 자국 IT산업의 보호 및 정보통제 목적 이외 현재 미국이 관장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ANA)[4]의 권능을 인정하기 못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사를 반영

- 美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인터넷 주소이양시 中·러가 自國內 검열과 통제에 악용할 우려"를 주장하며 이양불가 입장으로 "중국과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이버테러 국가"라는 인식을 보유

---

4)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 이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국제기구나 별도의 설립기구에 이양하여 '미국으로부터 인터넷 독립'을 외치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충되어 국제사회에서 충돌할 가능성 다분

【 한국, 美 트럼프 행정부와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 트럼프는 중국·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비례적 대응 공격'을 천명하는 등 '위대한 미국(Great America)'을 기저로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韓·美간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계기가 형성

- 현재 단순 협력관계를 「한·미사이버안보협약(동맹)」관계로 격상시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사회 변화유도를 위한 사이버안보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 구축 전망

【 북한, 국내 정세불안 시기 이용 대남 선전선동 공세 강화 】

- 국가 리더십 위기 국면과 대선 등 정국 혼란과 격동기를 틈타 대남 선전선동 조직을 동원한 악성 유언비어 조작, 국지전 도발 등 오프라인에서 대민항쟁 선동 등 국내정세 불안을 도모

-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선동 매체와 트위터·유투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대정부 불신과 사회분열, 이념논쟁을 조장하는 사이버공작 및 선거투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가능

- 이와 함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약칭 : 범민련) 등 해외 친북단체와 '통일학 연구소' 등 인터넷 선동사이트를 결합시켜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한 대북 경제지원 유인과 자유민주정권 흠집 내기에도 진력

【 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해킹 증대 】

- 중국의 대북송금 중단과 미국의 홍샹그룹 제재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외화벌이 또는 외화절취 등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이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뉴욕 연방 은행에서 거액(8100만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이 SWIFT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금절취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 농후

- 국내 금융전산망에 침투해서 공인인증서를 절취(2016.3)하는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금전절취 또는 재중 한국민을 매개로 악성 프로그램 판매·게임머니 획득 및 직접 랜섬 웨어 공격 시도도 예상

【 북한, 고급기밀 절취를 위한 사이버 공격 확대 】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및 모바일 인터넷(Mobile Internet) 등 'ICBM' 환경의 도래에 따라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도 한층 진화된 기법을 구사할 가능성

- 민간부문·개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정보절취·서비스거부공격(DoS) 등 형태에서 국가기밀·국방 및 산업기술 절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관·인물을 대상으로 목표 지향형 의도적인 지능형 지속공격(APT) 증가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의 환경에서 관리범위를 벗어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의 인터넷 연결 디바이스가 확산되고 있어 개인신원·금융정보 및 건강정보를 노리는 랜섬 웨어 공격 등 증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무선기술이 접목된 기기와 장비에 대한 업무활용 증가로 사물통신(M2M)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불법접근, 데이터변조 및 파괴가 가능한 악성코드 유포 등 새로운 공격 양상 등장

【 북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테러 강화 】

-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등 신기술등장으로 IT환경은 기존에 물리적으로 제어하던 것을 정보통신기술로 처리·제어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 환경으로 변화
- 전력·수도·교통·항공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테러가 지속 증가하고, 산업제어시스템(ICS)과 집중원격감시 제어시스템(SCADA)에 대한 APT(지능형 지속공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CCTV, 가정용 라우터, 스마트 홈 등 운영체제의 한계로 고급 보안기능을 갖출 수 없는 사물인터넷(Iot)을 좀비 기기로 악용하는 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 공격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3. 정책적 고려사항

【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른 후속 對테러 대응체계 구축 】

- 초국가적 테러 위협과 북한 테러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21세기 테러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정비 등 후속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
  -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 테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 개정시 테러 용의자들의 체포와 구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 추가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통신 기록과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집단별 인구통계정보 수집 및 대테러 목적 이용을 허용

○ 테러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테러관련 부서의 인원과 기구를 증설

- 테러방지법 통과이후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대테러센터의 지휘를 받아 최일선에서 테러에 대비해야 할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테러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4곳에 불과

【 對테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 대테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대테러 중앙 컨트롤타워, 정보기관, 집행기관 및 중앙과 현장 위기대응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

- 테러방지법 통과로 공식적인 대테러 중앙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되었으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 경찰·검찰 등 집행기관, 각종 재난 비상사태 중앙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간의 책임·권한 관계 설정이 미비, 정리가 필요

○ 국정원은 총리실 대테러 컨트롤타워 직속으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보기관들과 집행기관을 관장하며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바람직

【 테러 취약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및 주요 인프라 안전 관리에 만전 】

○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진입 했는바, 서울 및 근교 도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찰을 강화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

- 특히 이슬람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 불만내국인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해 자생테러를 발생할 가능성에 세심한 주의 필요

○ 민간인 밀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을 위해 공항·지하철·기차·버스 등 교통 중심지, 핵·화력·수력 발전소·가스·유류 저장 시스템 등 에너지 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 주요 사회 인프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만전

【 이민자 포용 교육 및 한국 동화 교육 병행 실시 】

○ 이민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이민자 포용 교육 및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 동화 교육을 병행 실시, 자국민과 이민자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

【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 압력에 대한 탄력적 대응 】

○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정치, 경제적 이유에서 탈출하는 탈북자의 수용이라는 특수한 부담을 부가적으로 지고 있어 여타 국가와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 설득할 필요

○ 다른 한편 이질적 종교와 문화 배경을 가진 난민유입이 야기하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난민 수용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음

【 난민에 대한 현지 지원정책의 확대 】

○ 탄력적인 난민 수용정책과 함께 해외 난민 캠프에 대한 시설, 교육, 의료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정책을 매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

- 분쟁 지역 현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차적으로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부가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분쟁 극복후 재건시 동 지역에 대한 우리의 경제진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난민심사 제도의 정비와 재정착 난민제도의 적극 시행 】

- 전체 난민신청자의 40%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불법체류자의 국내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의 악용을 방지하지 위하여 신청 자격의 적절한 제한, 심사 절차의 정비, 심사 인력의 확충 등 제도 개선이 필요

- 재정착 난민제도의 시범사업이 2017년 종결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

  - 난민캠프가 있는 현지에서 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별, 수용하는 동 제도는 사회통합이 용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 난민에 대한 적극적 사회통합과 관찰 】

- 난민제도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 종교, 문화, 복지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을 시행

- 난민 심사과정에서 IS와 같은 테러조직 구성원에 대한 완벽한 적출의 실패와 국내체류 후 사회 통합의 실패로 급진화 되는 경우를 대비, 특히 이슬람 공동체의 경우 극단주의 그룹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국제 공조가 필요

【 국제적으로는 한·미 사이버안보협약(동맹) 체결 적극 추진 】

-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가안보 확보를 내세워 중국의 「사이버안전법」 시행과 함께 美·中간 '인터넷 주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과 북한은 사이버안보에서 가장 위협적인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사이버안보 방어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사이버안보협약(동맹)」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의 중국내 사이버공격활동을 불허토록 유도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활동이 필요

【 국내적으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적극 추진 】

- 2017년 북한은 국내 정세 불안과 대선 등을 틈타 사회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대남 선전선동 및 경제난 타개를 목적으로 금융자산 절취 등 의도된 지향형 사이버공격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

- 우리는 사회핵심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보안실태 점검, 사이버공격 진원지 추적기법 개발과 국가안보와 국민안정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정식명칭,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적극 추진.

2016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